

# 지역산업과 고용

2022 | vol.4

## ▶ 이슈분석

- 지역일자리 창출과 거버넌스 | 이규용
-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과제 | 김기현
- 지역별 플랫폼중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 김준영

## ▶ 지역사례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 신현욱
- 대구시 주력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전환 추진방향 | 최원욱
- 미래차시대로 대전환 대응, 경북의 일자리 정책 | 박동현

## ▶ 행정통계로 본 지역고용

## ▶ 지역-산업 고용동향



# 민선 8기 지역일자리 정책: 거버넌스·청년·플랫폼노동

민선 8기 지자체가 출범한다. 한국의 지방 자치도 이제 30년을 넘어섰으니, 적지 않은 시간과 경험이 쌓인 셈이다. 지역 고용과 관련된 정책 경험도 어느 덧 십 수년을 훌쩍 넘겼다. 2006년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고용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0년에 일자리 공시제가 도입되면서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고용부의 지역 일자리사업 예산은 2006년 55억 규모에서 2020년 1천억으로 규모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사업 방식 역시 지역의 전략산업 및 복지 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다변화되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고용정책은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기술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다양한 외부충격 등 지역 고용상황을 둘러싼 내외부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지난 봄호에서 다루었던 '지방 소멸'와 같은 극한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각 지역이 어떤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잘 실천하는지에 따라 생존과 반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지리적 혹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지만, 고려해야 할 공통의 아젠다 (AGENDA)는 존재한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민선 8기 지역 일자리의 아젠다를 **거버넌스, 청년, 플랫폼노동**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담았다.

첫 번째 키워드인 **거버넌스**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왜 지역적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연관된다. 지역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지역문제는 국가라는 틀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더군다나 최근 지역 간 일자리 양과 질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슈분석1: 이규용).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정책 체계와 기존의 지역고용 거버넌스로는 점점 더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 키워드인 **청년**은 '지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누구를 타깃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연관된다. 지금까지 청년과 지역은 서로 별개의 정책 영역인 것처럼 다루어져 왔지만 사실 두 영역은 서로 깊게 얽혀있다. 지역의 인구 위기는 주로 청년층의 지역 유출에 있으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일자리·교육·문화·복지 문제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밭을 딛고 있는 삶의 공간, '장소'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청년 일자리정책은 전체 일자리 예산의 3.9%에 불과하다(이슈분석 2, 김기현).

셋 번째 키워드인 **플랫폼노동**은 '기술과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면하게 될 일의 미래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연관된다.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슈분석3, 김준영). 특히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의 규모와 특성은 네트워크의 크기, 인구밀도,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지역주민의 활동 및 소비성향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김준영 연구위원의 분석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근로관행이나 노동조건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과 특징을 갖는지를 보여준다.

이슈 분석에 수록된 원고들은 지면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각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황, 문제점, 그리고 정책 개선 방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 사례는 지역 거버넌스와 관련한 새로운 도전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력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사례 도 다루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 일자리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위의 키워드와 관련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행정통계로 살펴본 청년고용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청년 피보험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직을 통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 6월.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이상호



KEIS-Local Industry and  
Employment Policy

# 지역산업과 고용

2022 | vol.4

## Contents

---

■ 편집자의 글	2
■ 이슈분석	
• 지역일자리 창출과 거버넌스   이규용	8
•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과제   김기헌	21
• 지역별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김준영	33
■ 지역사례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신현욱	48
• 대구시 주력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전환 추진방향   최원욱	55
• 미래차시대로 대전환 대응, 경북의 일자리 정책   박동현	62
■ 행정통계로 본 지역고용	
• 고용행정통계로 살펴본 청년고용	68
■ 지역-산업 고용동향	
•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현황	76
• 지역고용이슈	81

---



## 이슈분석

---

- 지역일자리 창출과 거버넌스 | 이규용
-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과제 | 김기현
- 지역별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 김준영

## 이슈분석

## 1

지역일자리 창출과 거버넌스<sup>1)</sup>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 1 지역일자리정책의 함의

지역일자리정책이란 지역 간 노동시장 여건에 맞춰 추진하는 자원조정 형태의 정책을 넘어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경쟁력과 고용성과를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으로, 지역 수준에서 다양화와 적응력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역 수준의 고용정책 필요성의 논거로 지적할 수 있는 혁신의 가능성과 새로운 고용 기회의 창출,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대응 등은 모두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의미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변동도 지역별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와 이민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노동력 자원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고령화는 OECD 국가들 모두가 겪고 있지만, 지역별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고용 조정의 한 방법이며 인적자원의 지역 간 재분배 기제인 지역 간 인구가동이나 국제적 인구가동은 지역에 도전이자 기회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와 지역 간 노동이동도 지역 수준에 맞는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한 조정을 위해서도 지역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한 조정이 요구되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한 조정은 전국적인 수준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유연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일자리정책은 모든 일자리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수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역 간 역할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자는 것이며 핵심 개념은 일자리정책의 지역유연성이다. 많은 정책 중에

1) 이 글은 이규용외(2021),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개선방안」, 일자리위원회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할 정책도 있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도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도 해당된다. 따라서 지역일자리정책의 수행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 수준으로 일자리정책이 내려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부작용도 있으며 지역의 유연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적 수준에서는 정책, 규제, 핵심서비스, 민관파트너십 개발 등을 책임지고, 지역은 전략적 계획, 지역 계획의 수립과 합의, 지역파트너십 촉진 등을 책임지는 형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지역일자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지역일자리정책은 노동시장정책(LMP),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촉진·지역혁신·지역대학과 산업의 협력·지역전략산업정책·도시재생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일자리 창출정책, 사회적 경제 영역, 지역 청년보장정책 등 매우 광범위하다. 중요한 점은 지역 특성에 맞게 이러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일자리정책을 위한 거버넌스는 지역수준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거버넌스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 2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필요성

### 가.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화와 격차 사회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산업구조 등 일자리 환경의 차이에 따른 격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 산업화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격차, 지역주력 산업의 퇴보나 해외이전에 따른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 인구유출 심화, 청년층 이동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도전과 대응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2)</sup> 첫째, 인구변동으로 인한 인적자원 유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의 영향은 농어촌단위의 기초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인력 부족은 지역 내 생산 및 소비활동을 위축시켜 지역 활성화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인구변동이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나아가 지역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

2) 이규용(2022), 지역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인용

수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력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지역 산업생태계의 재구축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사회,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트렌드에 따른 수직협력에서 수평협력으로의 네트워크 경제 강화와 산업 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지역이 안고 있는 과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정책의 혁신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정책에 의거하여 추진되어 왔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사업들의 융합 설계 및 운용이 곤란하다. 최근 들어 지역혁신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대개조, 상생형 지역일자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역혁신 프로그램과 같이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정책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주도의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서 정부 부처 간 다양한 협업모델로 이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은 지역노동시장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출산업보다 내수산업이 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높으며,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는 주력산업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산업도시들도 지역복원 혹은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지역일자리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자. 먼저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지역의 일자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산업구조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그림 4]는 입지계수<sup>3)</sup>를 이용하여 2010년과 2019년의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력산업의 구조와 변화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창출력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일자리정책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는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국가 전체에 비교해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LQ가 1보다 크면 기반산업으로 간주하며, 1보다 작으면 비기반산업으로 분류한다.

$$LQ_{ij} = \frac{\frac{L_{ij}}{\sum_{i=1}^n L_{ij}}}{\frac{\sum_{j=1}^n L_{ij}}{\sum_{i=1}^n \sum_{j=1}^n L_{ij}}} \quad L_i = i \text{ 산업 취업자 수}, L_j = j \text{ 지역 취업자 수}$$

그림 1 경기 제조업 입지계수 분포(2010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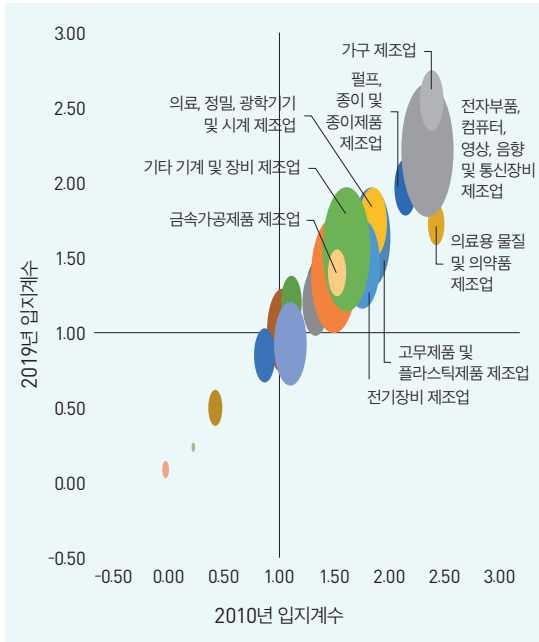


그림 2 부산 제조업 입지계수 분포(2010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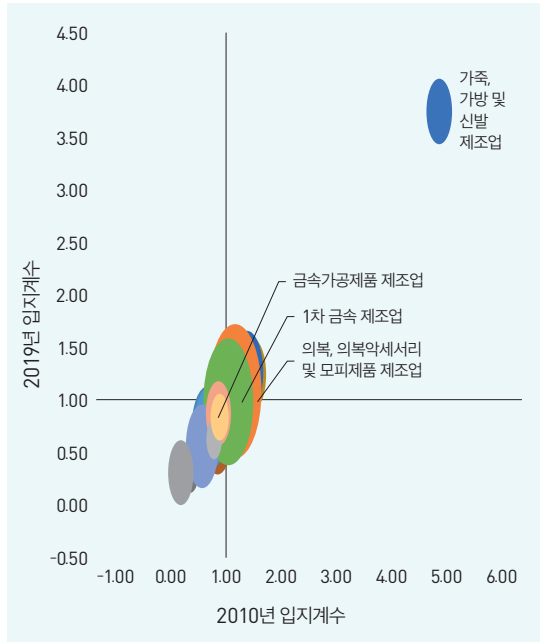


그림 3 충북 제조업 입지계수 분포(2010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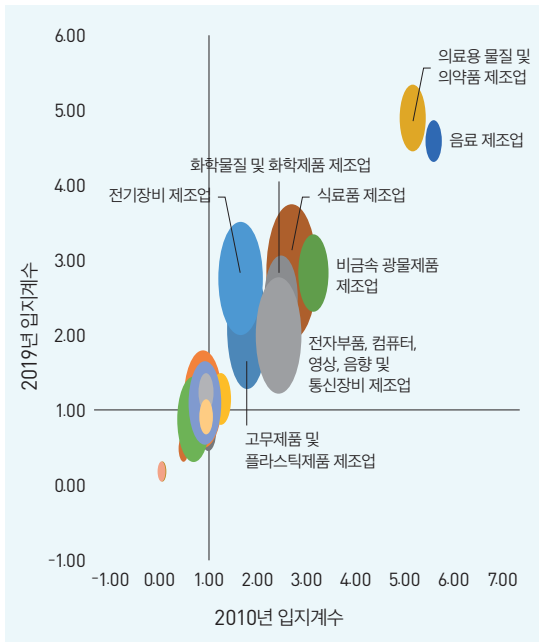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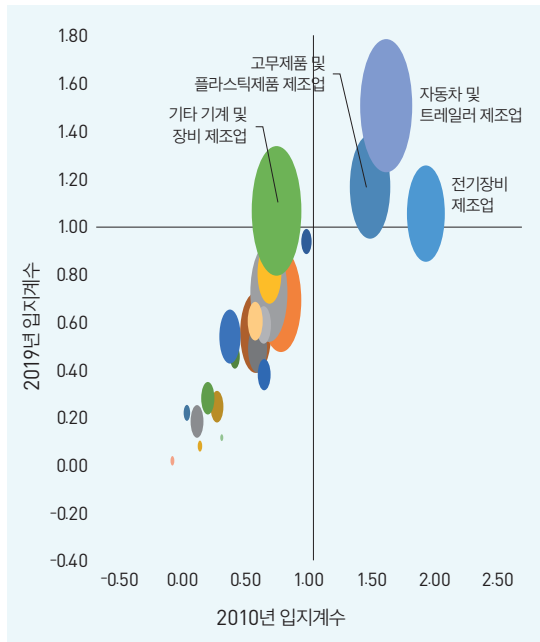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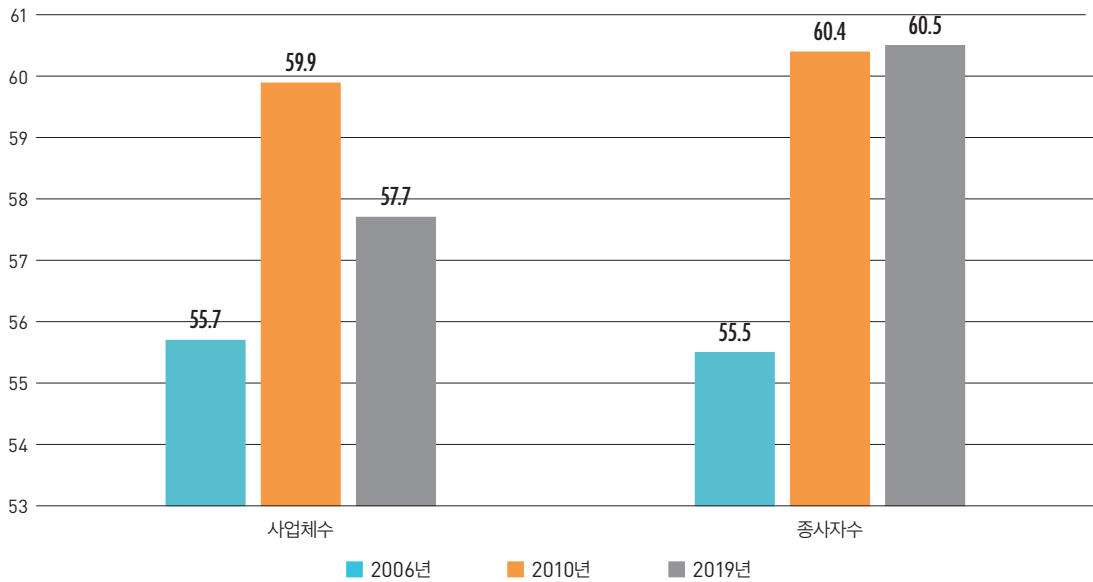
그림 4 광주 제조업 입지계수 분포(2010년-2019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5]에서 보듯이 2019년 기준 전체 종사자 수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은 14.5%로 2010년의 14.5%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 수 비중이 일정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경력직 채용 관행과 맞물려 신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는 좁은 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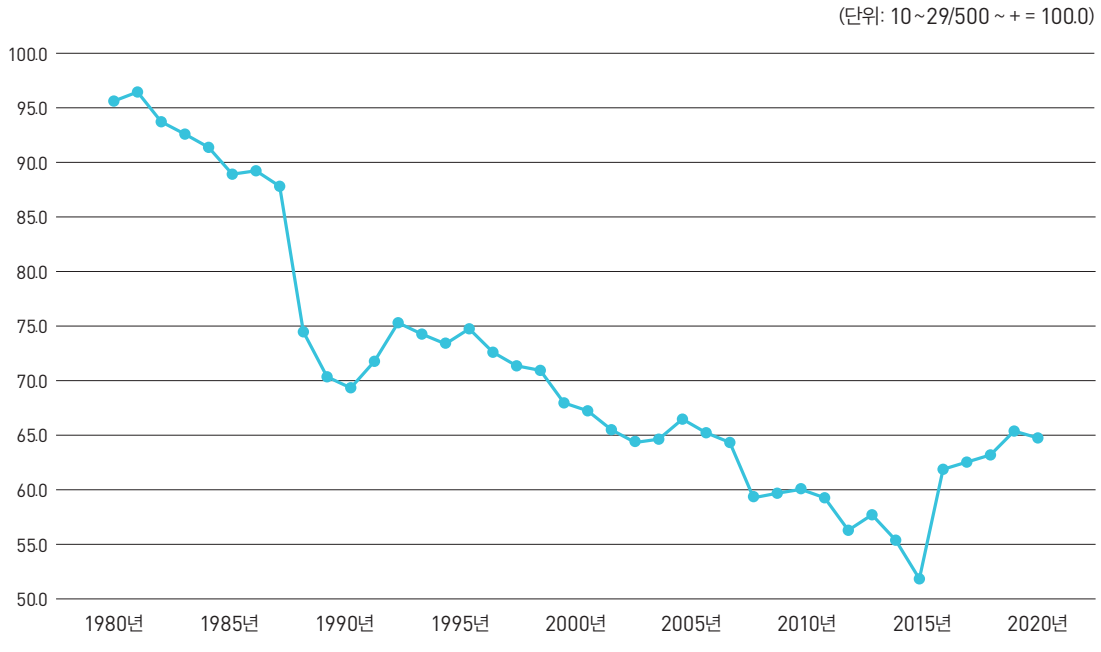
그림 5 300인 이상 수도권 점유율



자료 : 통계청 KOSIS

또한 기업 또는 사업체 규모나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노동시장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원·하청 간 불공정 해소나 노동시장 규제 완화로는 낙후된 부문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지역 특성과 결합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림 6]은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10~29인 규모의 임금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10~29인 임금지수는 500인 이상 임금 지수와 대비했을 때 1981년 96.5에서 2014년에 51.7로 확대되었다가 2019년에는 64.7로 다소 완화되었는데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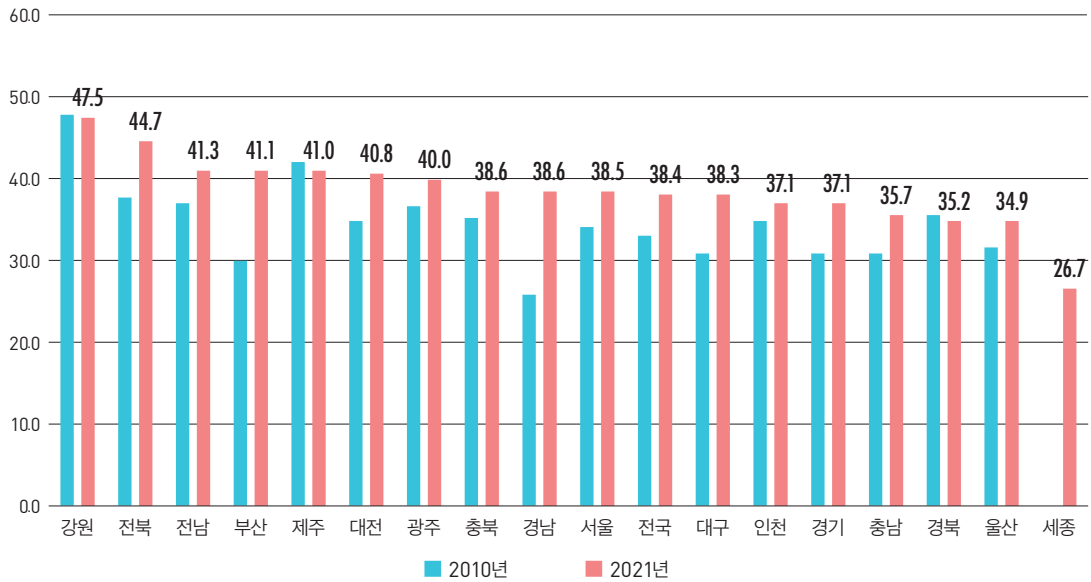
그림 6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10+), 정진호(2021), 노사공포럼 발표자료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상 연공서열적 특성이 강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격차는 장기근속자에게 더 확대됨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 중 또 하나는 고용형태별 격차로 [그림 7]에서 보듯이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많은 지역에서 확대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지역 특성과 결합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격차문제를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원·하청 간 불공정 해소나 노동시장 규제 완화로는 낙후된 부문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7 지역별 비정규직 비율(2010~2019년)



자료 : 통계청 KOSIS

이러한 여건에서 지역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화된 일자리정책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해소나 양질의 일자리 성과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우수한 인적자원이 지역에 남아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도권의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비수도권 지역 또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발전지역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한정된 투자자원을 둘러싸고 지역 간 경쟁을 하는 셈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좋은 일자리 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직자들에게 좁은 문을 향해 인적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문제 인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지역의 여건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행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는 지방재정의 여건 상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지역이 안고 있는 자원의 제약도 있으며,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규모

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려우며 추진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나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의 기획, 예산의 배분 및 실천가능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면 된다. 전국단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표준화한 정책을, 지역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정책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갖추면 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은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져 왔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이다.<sup>4)</sup>

## 나.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의의

지역별 일자리정책 및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일자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일자리정책 대응의 주체로서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이 주목받아 왔다.

그동안 국내에서 논의되어 온 지역일자리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등 지역경제주체, 고용지원센터, 훈련기관 등 지역 노동시장 주체가 지역경제산업 여건 등에 부합하는 지역일자리정책을 협치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는 지역의 요구 및 특성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속에 고용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밀착형 일자리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가능하다. 일자리정책 부문은 지역거버넌스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정책에 지역 노동시장 주체의 다양한 요구가 포함되어야만 일자리정책 추진과 실행의 정당성, 효과성, 참여 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구현되어 다양한 주체가 추진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주체 간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율할 민주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광역단체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지역고용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지역 주체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지역고용거버넌스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로 논의된 의제가 지역에서 구현되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일자리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에서 논의된 의제가 구체화되어 각 노동시장 주체에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

4) 이규용(2022), pp.25~26에서 인용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역별 일자리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정책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3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그동안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각 일자리정책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이다. 여기서는 현 단계에서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가. 지역행정체계의 일자리정책 분절성 극복

대부분의 광역지역에서는 일자리정책실,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국 일자리정책 총괄기능을 하는 일자리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들은 컨트롤 타워보다 일자리사업 총괄기능이 강하며 일자리정책의 범위도 다소 차이가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실국 간 연계협력은 업무협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계협력은 개별 실국 간 사업의 보고·점검·검토·종합토의 수준이며 사업기획, 조정, 실질적 연계협력은 특정 사안에 국한하는 등 미흡한 실정이다. 정책추진체계상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람과 시스템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국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일자리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 자체 예산 중 일자리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유관 실국 간 연계협력 일자리사업 기획에 대한 예산지원을 신설하도록 한다. 또한 중앙정부 대규모 공모사업 시 일자리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타 실국 간 연계협력 체계를 갖고 사업설계, 실행, 성과관리·평가 및 환류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는 실국 간 실효적 연계협력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① 자치단체장(최소 부단체장)이 일자리 관련 실국 간 회의를 주관하여 연계협력을 지시하는 방식, ② 지역 일자리정책에 대해 일자리전담부서(실국 단위)가 타 실국 간 수평 체계를 넘어 일자리정책 기획·조정·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③ 일자리 전담부서가 실국 일자리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현행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활용방안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기존 기구들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데, 이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역일자리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설립 근거가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이들 기구와의 역할관계,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는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일자리 관련 기구 중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역일자리 거버넌스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자위 등을 분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첫째,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을 하나의 틀에 담아내는 데 있다. 인자위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둘째, 일자리의 사회적 대화 틀이 가능하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노동 등의 사회적 대화 틀이기 때문에, 이를 일자리의 사회적 대화로 확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노동, 노사관계 외에 폭넓은 일자리 의제가 논의되기 어렵다. 각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 노사관계 등의 논의 기구이기 때문에, 산업, 경제 등 폭넓은 일자리 관련 주제들이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역시 노동, 노사관계 등에 특화되어 있어서 일자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노사민정 관련 부서 외에 다른 부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지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인식되기 때문에, 일자리, 경제, 산업, 기업 등 폭넓은 부서의 의제가 논의되는 데 한계가 있다.

제2안으로는 지역일자리위원회가 거버넌스로 역할하고,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지역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의제가 논의되고 심의되게 하는 형태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되 노동,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첫째, 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 거버넌스로 다양한 일자리 의제 논의·심의가 가능하며,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기구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직간접 부서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능하다. 둘째, 일자리위원회 내에 인자위를 둬으로써 일자리와 직업훈련이 연계된 논의가 가능하다. 인자위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 논의 및 심의 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구조이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첫째, 일자리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갈등, 모호성 문제가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심의 기능이 있는 반면, 일자리위원회는 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여전히 상위 기구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일자리위원회에서 지역고용전략을 수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상위법의 인자위가 일자리위원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체계상 혼란이 발생한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분과에서 심의되는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노사민정협의회, 인자위 등이 참여하는 통합 지역일자리위원회이다. 이 방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인자위 등의 각 주체가 지역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일자리위원회의 활동이 노사민정협의회, 인자위 등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지역의 일자리 관련 의제가 지역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다. 지역일자리위원회에 노사민정, 인자위 각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일자리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노사민정, 인자위 등에서의 논의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기구가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 둘째, 통합 사무국의 운영과 지원으로 지역일자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활성화가 가능하다. 지역일자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연구, 자료, 의제 발굴, 운영 등)이 필요한데, 통합 사무국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첫째, 여전히 법적 근거 기구들과의 혼란이 발생하며 일자리위원회에서의 심의가 노사민정협의회, 인자위 등에서의 심의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중 어느 안이 적절할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은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의 주도권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논의는 광역단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이는 기초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기초지역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점에서 광역정부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기초지역의 일자리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초지역의 일자리정책 지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초지역 간 일자리정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연계 협력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광역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다. 일자리거버넌스와 일자리전달기구의 연계 방안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기존의 인자위,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포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분과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거버넌스 기구는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거버넌스 산하의 분과는 거버넌스 기구의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방향이 설정된 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실질적으로 발굴·기획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달체계의 중추로서 지역 일자리전달기구는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의 중간 조직, 일자리전달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일자리전달기구의 연구기능·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거버넌스와 일자리수행 기관의 전문성을 지원하여 전반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원동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라.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 연계 방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일자리 창출정책은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여, 산업정책, 기업지원정책, 도시재생정책, 탄소중립정책, 교육 및 복지정책 등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업정책은 오랫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산업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대개조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산업 및 지역발전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의 지역유연성을 높이고 초광역단위, 광역과 기초지역 또는 기초지역 간 일자리정책의 연계 협력 및 추진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역일자리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많은 지역일자리정책들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바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연계 방안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사업 자체가 애초부터 중앙부처 간 협력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절차가 진행된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다시 해당 사업과 관련한 타 부처에 공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차원에서 사전에 논의 및 협의를 요청된다. 이 경우 사안별로 협의하기보다는 중앙부처 차원의 초광역단위를 포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추진,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행정권역을 벗어나 지역의 내생적 일자리 창출전략 모색을 위한 지역산업 및 노동시장권역에 기초한 지역일자리정책의 추진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기획, 예산의 배분, 평가를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초광역단위의 일자리거버넌스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각 기초와 광역이 각 지역별 행정단위에 기반한 것이라면 초광역단위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한 개념이다.

초광역단위 거버넌스 모델은 영국의 RDA나 프랑스의 레지옹과 같이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상위체제로 지역일자리정책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중앙부처의 관련 예산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담당(지역투자협약 예산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조절기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초광역단위의 일자리정책 거버넌스 모델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정책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중앙부처 협업예산에 기초하여야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부처 협업모델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초광역단위 일자리거버넌스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모델은 앞에서 논의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집기능으로서의 거버넌스보다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체계의 기능이 보다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협업예산 기능을 벗어나 정책의 지역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간 협력과 예산배분,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 일자리정책의 지역재량권과 책무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포괄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정책들에 비해 일자리정책이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상시적인 조직을 갖추고 각 정책유형별로 유연하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일자리정책 유연성 모색을 위한 지역일자리 역량의 강화, 지역의 일자리 추진 체계 및 지역 간 연계 협력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성과를 제고시켜 지역발전과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규용·이병훈·전병유·박배균·정준호·고영우(2014), 「한국의 지역고용전략-이론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전병유·임상훈·정준호(2015), 「한국의 지역고용전략-실행전략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고영우·김우영·오민홍·이상호·홍성호(2016), 「지역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고영우·박상철·전인·이두희·신운철(2021),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개선방안」, 한국일자리 위원회.
- 이규용(2022), 「지역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제언」,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2021), 노사공포럼 발표자료.

## 이슈분석

## 2

##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과제

김기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글에서는 청년정책 중에서 지역청년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청년정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수립 이후 청년의 삶을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도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청년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일자리정책(지자체 매칭사업)은 전체 청년 일자리 과제(148개) 중 5개 과제에 불과하고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정책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정도에 그쳤다.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정책부서와 청년정책부서 간에 청년일자리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전히 혼선이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 사업이나 예산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역청년의 유출로 이어지고 이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정비를 제안하였다.

## 1 들어가며

저출생으로 인해 청년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2000년 20-30대 청년인구 중 수도권 비중은 48.5%에서 2019년 54.0%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군구 중 군 단위 인구는 8.1%에서 6.0%로 감소하였다(박진경, 2022: 40). 20-30대 청년의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전체인구 유입의 세 배에 달한다(이상호, 2022: 14). 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주된 이유는 2015년 이후 직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8).

이 글에서는 지역청년을 위한 일자리정책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구분해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sup>1)</sup>

## 2 중앙정부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의 지역청년 일자리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의 중점과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제3차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일자리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7). 이 로드맵에서는 지역에 대한 중점과제와 청년에 대한 중점과제가 나뉘어 있다. 지역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민간일자리 창출 과제로 제시되었다.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지역일자리 창출 과제는 지역의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과의 연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일자리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청년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지역일자리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개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시작해 전국 시도로 확대된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지역일자리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이 있다.

5개년 로드맵에서 제시된 청년일자리 과제는 10번째 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서 다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문재인정부의 3대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 사업들은 2018년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을 통해 구체

1) 이 원고는 지역청년을 다룬 청년정책을 다룬 것으로 지자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된 원고(김기현, 2022b,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년 3월 통권 제305호 pp. 44-58.) 참조

화되었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이 로드맵에서는 3대 핵심사업 외에 청년 해외취업과 블라인드 채용, 신직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이 로드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역 문제와 청년 문제가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하위 분야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였다(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박미선, 성재민, 이철선, 최한수, 2020).

청년기본법은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와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로 지역청년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2). 우선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 제4조에 청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시도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시도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해야 하고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수립 이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도 청년 일자리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와 사업 시행을 다루고 있으나 청년정책이라는 하나의 틀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들이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청년기본법 수립 이후 청년정책은 이전과 차이가 있다.

표 1 중앙행정기관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관련 행정부서 현황(2022년)

구분	청년일자리 업무부서	지역일자리 업무부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청년정책협력과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지역기업정책관

자료: 각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2022년 5월 28일 검색

그렇지만 청년기본법 수립 이후에도 지역청년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중앙부처의 경우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2년 현재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부서를 살펴보면, 청

년일자리 업무와 지역일자리 업무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의 청년일자리 업무는 청년고용정책관이 맡고 있지만 지역일자리 업무는 지역산업고용정책과가 맡고 있다.

지역일자리 업무는 청년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반을 다루는 것이므로 청년정책과 분리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업무와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청년정책은 지역 간 균형 발전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지역일자리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2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시행계획 지역일자리 과제 및 예산(2022년)

(단위: 개, 억 원)

구분	과제	예산	지역청년 일자리사업	
			과제	예산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70	56,580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396
			•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32
			• 청년 도전지원사업(지자체 청년센터)	117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56	12,428	• 창업중심대학(지역청년창업 거점)	122
			• 청년 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	388
3. 일터 안전망 강화	10	176	-	-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12	8,312	-	-
합계	148	77,496	5	3,05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a). 2022년 청년정책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이점은 청년정책시행계획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이 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인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시행계획 중에서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148개 과제 중 5개 과제에 그쳤다. 5개 사업의 예산은 3,055억 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9%에 불과했다.

이것은 지역청년 일자리사업을 중앙부처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제한해서 살펴본 것이다. 중앙부처가 전국사업으로 수행해 지역청년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면 지역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사업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단위로 삼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역청년사업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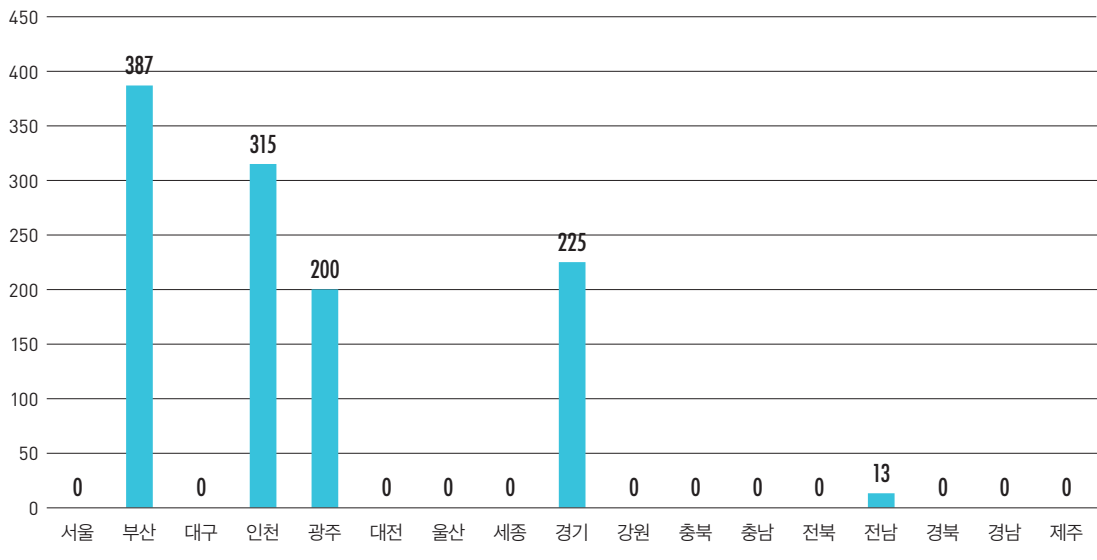


시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없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지역청년사업으로 보는 것도 제한적이어서 중앙부처사업 중 지자체 매칭사업에 한해서 지역청년 일자리사업을 살펴보았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른 대상 중심의 사업과는 달리 청년정책은 2020년에 청년기본법 수립을 통해 뒤늦게 중앙정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중앙과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정책 전달체계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림 1 지자체 청년센터 예산 중 국비 예산(2022년)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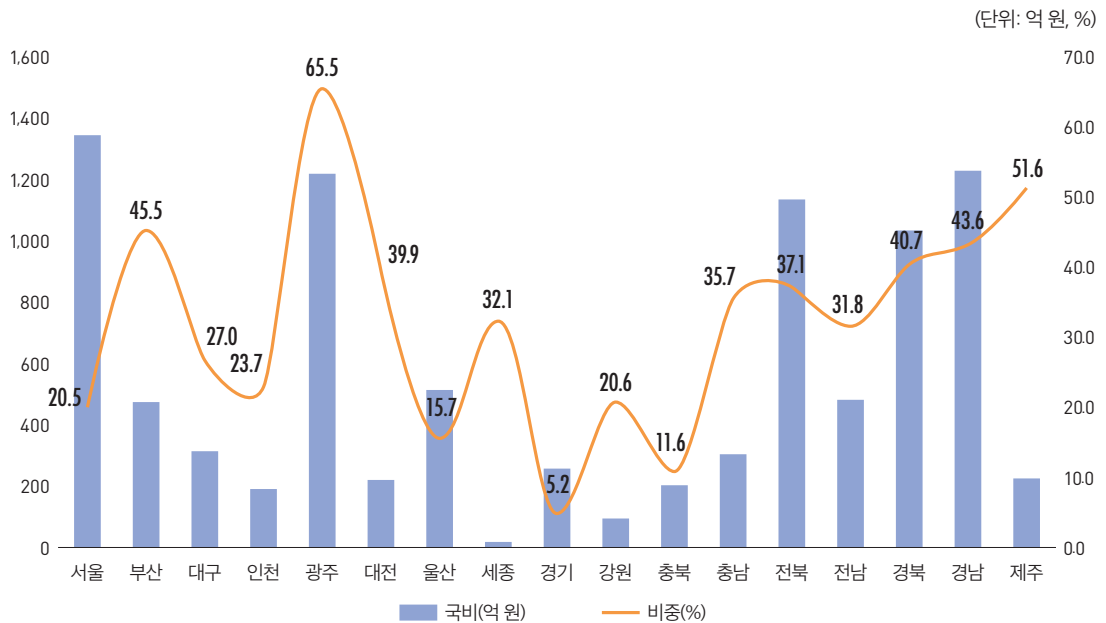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2021: 44). 지자체 청년정책 통계자료집

이와 관련 2021년 현재 지자체 청년센터 중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 예산 중에서 국비 예산은 5개 시도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에 매칭으로 전달되는 국비 예산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경기도의 경우 국비 비중은 5.2%에 불과한 데 비해 광주는 65.5%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 국비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은 도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시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국비 예산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시도나 시군구비를 통해 대규모 독자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높은 국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시도 청년정책 전체 예산 중 국비 비중(2022년)



자료: 국무조정실(2021: 44). 지자체 청년정책 통계자료집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지자체 매칭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 사업이 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청년일자리사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청년정책사업 중 이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이 사업은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당초 2021년에 일몰될 사업이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연장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연장 사업에 포함되었다.

청년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로 산하기관인 고용센터나 청년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추진해 오다가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매칭사업으로 2021년부터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 이전에 비슷한 사업으로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자체 청년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센터에서는 구직단념 청년을 모집해 심리정서와 사회성,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지자체 전달체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2022년

사업 시에 지자체 청년센터보다는 지역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초 취지를 계속 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 2022).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역청년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17번째 약속으로 청년정책을 다루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151-155). 17번째 약속에는 3가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은 90번째 중점과제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정과제는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 개입하여 취업과 경력 설계 및 상담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청년 중점과제(2022년)

국정목표	약속	국정과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주: 국정목표 6은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정과제도 구체화할 예정임

다음으로 지역청년과 관련된 내용은 92번째 중점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부분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제에서는 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라는 이름으로 지역별로 거점청년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이 센터가 일자리 분야 업무를 다룰지는 불분명한데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지자체 전달체계가 새롭게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다루는 6번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추후 국정과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현 단계에서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 3 지자체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현황 및 문제점

여기에서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일자리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자리정책을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된 것은 2020년 청년기본법 수립 이후였던 것과는 달리 지자체에서는 2015년부터 청년정책을 추진하였다.

표 4 광역지자체 지역청년 일자리 행정부서 현황(2022년)

구분	청년정책부서		일자리정책부서
	총괄부서	청년일자리부서(청년부서)	
서울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청년지원팀	일자리정책과
부산	청년산학창업국	(청년희망정책과)	경제일자리과
대구	일자리투자국	청년정책과 청년진로팀	일자리노동정책과
인천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담당	일자리경제과
광주	청년정책관	청년일자리팀	일자리경제실
대전	청년가족국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국
울산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	일자리경제국
세종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담당	일자리정책과
경기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경제기획관
강원	일자리국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청년일자리담당	일자리정책과
충북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일자리정책과
충남	청년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전북	기획조정실	(대도약청년과)	일자리경제정책관
전남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일자리경제과
경북	청년정책관	청년일자리팀	일자리경제노동과
경남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담당)	일자리경제과
제주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일자리과

자료: 각 광역시도 홈페이지, 2022년 5월 28일 검색

서울시는 2015년 1월 제일 먼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년간의 청년정책 방향을 담은 ‘서울형 청년보장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서 청년정책 전담 행정부서를 두었으며 청년 참여기구와 중간지원조직인 청년 허브를 통해 청년정책추진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어 나갔다. 서울시에 이어 대구와 광주, 경기, 전남 등에서도 2015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 인천을 끝으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갖추게 되었다.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경우 청년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정책 간의 분리 문제가 쟁점이라면 지자체 정책 추진에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자체 자체가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 간의 분리 문제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청년정책 중 청년일자리정책을 일자리부서에서 다른 대상과 함께 다룰지, 아니면 청년정책의 일부로 다룰지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 부서와 일자리정책 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에서 일자리에 더 중점을 둔 곳과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둔 곳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은 일자리를 다루는 행정부서의 하위 조직으로 청년정책 부서를 두고 있다. 이곳에서 청년정책 부서는 청년일자리만이 아니라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주된 업무는 청년일자리정책이다. 반면, 서울을 비롯하여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 부서를 별도로 두거나 지자체 업무총괄조정부서의 하위 조직으로 두면서 일자리정책을 다루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다루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어느 방식의 접근이 더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중심에서 삶 전반으로 청년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년정책의 하위 조직으로 청년일자리정책이 다루어지거나 최소한 일자리정책의 하위 범주로만 청년정책이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의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쟁점은 법적 청년 연령에 관한 것이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데 각 법률과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단서가 추가된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이지만 법률과 조례의 제·개정 시에 가급적 청년기본법에서 내린 정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청년의 연령을 따르는 방식으로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청년 연령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를 청년에 포함하는 곳도 있다.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청년통계 결과를 보면, 30대 후반을 포함한 경우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27.5%나 되고 40세에서 55세까지 규정된 곳은 11.5%에 이르고 있다(국무조정실, 2021).

30대 후반부터 일종의 성인정책으로 모든 형태의 기능 중심 정책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별한 지원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청년 연령 상향 현상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기초지자체 중 지역소멸 문제로 당사자인 청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표 5 지자체 청년정책시행계획 청년 일자리 과제 및 예산(2022년)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과제 수	예산		
		국비	지방비	전체
서울	12	1,120	157,564	158,684
부산	27	28,373	33,401	61,774
대구	23	34,774	36,034	70,808
인천	27	7,628	33,426	41,054
광주	35	20,008	28,687	48,695
대전	35	10,754	15,854	26,608
울산	27	4,151	10,779	14,930
세종	16	7,610	8,578	16,188
경기	15	35,331	113,884	149,215
강원	20	12,306	17,859	30,165
충북	44	21,084	34,344	55,328
충남	31	23,846	31,379	55,225
전북	38	51,542	37,250	88,795
전남	32	24,864	54,066	78,930
경북	92	57,671	60,467	118,138
경남	50	40,039	41,825	81,864
제주	34	22,131	15,558	37,689
합계	558	403,232	730,955	1,134,09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b),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청년 일자리 과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경북이 92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5개 과제로 가장 적었다. 그런데 과제 수가 많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더 적극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과제 단위를 쪼개서 제출한 곳과 모아서 제출한 곳의 차이에 가깝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지방 재정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데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비로 잡고 있다.

#### 4 향후 지역청년 일자리정책 과제

지금까지 청년정책 중에서 지역청년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청년정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수립 이후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도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청년기본법 제정이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청년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와 매칭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지역청년 일자리정책은 전체 청년 일자리 과제(148개) 중 5개 과제에 불과하고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정책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정도에 그쳤다. 지자체에서는 일자리정책부서와 청년정책부서 간에 청년일자리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전히 혼선이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 사업이나 예산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역청년의 유출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정비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역청년 일자리에 대한 접근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일상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과 관련된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국무조정실, 2022).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처리에 있어서 지역청년에 대한 이슈를 중요의제로 다루고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지자체 청년정책 책임관회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연석회의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지역청년조정위원회와 지역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청년 행정부서와 일자리 행정부서 간에 사업 추진 시와 추진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업무 조정과 협의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과 연결해 접근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일자리 업무를 청년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청년일자리 업무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 공간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2),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 4. 18).
-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2022a), 제1차 청년정책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관계부처 합동(2022b), 제1차 청년정책시행계획[지자체].
- 국무조정실(2021), 지자체 청년정책 통계자료집.
- 국무조정실(2022), 2021 청년정책백서.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박미선, 성재민, 이철선, 최한수(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무조정실.
- 김기현(2022),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년 3월 통권 제305호, pp. 44-58.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박진경(2022),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와 자생적 대응전략”, 지역산업과 고용 2022년 봄호, pp. 35 -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청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2022년 5월 28일 검색.
- 이상호(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고용 2022년 봄호, pp. 8 -21.
- 일자리위원·관계부처 합동(2017),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
- 일자리위원·관계부처 합동(2018), 청년일자리대책.
- 통계청(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보도자료(2022. 6. 29).



## 이슈분석

## 3

지역별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김준영 | 한국고용정보원

## 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급과 결합된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인간의 노동이 조그마한 과업(tasks)으로 쪼개져서 거래 또는 중개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이 과업의 중개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개체인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동 서비스의 거래가 조정되는 디지털 네트워크’(Pesole et al., 2018)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 친숙한 디지털 플랫폼은 음식 주문앱, 대리운전앱, 가사도우미앱 및 재능공유형 앱<sup>1)</sup> 등이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기반형(local-based)’ 플랫폼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웹기반형(web-based)’ 플랫폼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였다(ILO, 2021). 특히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비대면 전환과 경제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한 배경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알선과 중개를 통해서 일거리를 구하고 수입을 얻는 플랫폼종사자(platform workers)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유급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고객과 연결되는 고용형태’(OECD, 2019)로 정의된다. 2021년 11월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수는 취업자의 2.6%에 해당

1) 대표적인 재능공유형 앱으로는 크\*, 숨\*, 탤런트\*\* 등이 있다.

하는 6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플랫폼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증가한 플랫폼종사자의 다수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 등과 같이 임금노동자에게 권리로 보장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종사자는 수입의 불안정, 높은 사고와 부상 위험,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고객평가에 대한 높은 의존, 분쟁 해결 절차의 부재 등 부정적 문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 (Urzi et al., 2020).

플랫폼종사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2015년부터 국내·외에서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지역 수준에서 플랫폼노동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은 많지 않다. 플랫폼종사자의 규모, 증가 속도 및 근무환경에 있어서 지역 간에, 특히 대도시와 비대도시 간에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주문을 받으나 고객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역기반형 노동’<sup>2)</sup>(local-based platform works)은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 한정되어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이 유형의 플랫폼종사자는 농어촌·비도시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대도시권에 거주하는 것이 일거리를 얻고 수입을 얻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이 지역기반형 노동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기반형과는 달리 모든 작업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웹 기반형 노동’<sup>3)</sup>(web-based platform works)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온라인만 연결되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플랫폼 일거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유형의 노동은 대도시에서 거주하더라도 일거리를 얻는 데 특별히 더 유리할 것이 없어, 전 지역(세계)에 고르게 분포하거나 오히려 주거비와 물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도시·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별 플랫폼종사자의 특징은 우리가 플랫폼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 제1장에 이어 제2장은 본 고가 지역별 플랫폼종사자 비교를 위해 활용한 자료를 소개하고 플랫폼종사자의 개념을 설명한다. 제3장은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유형별 비중을 지역별로 비교·검토한다. 제4장은 수입, 노동시간, 사회보험 가입 현황, 작

2) 음식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우미, 간병인 등이 이 유형의 플랫폼종사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기반형 노동이 플랫폼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미술·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웹페이지 제작과 같은 IT 관련 직종, 번역 등이 이 유형의 플랫폼종사자에 해당한다.

업 중 경험한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종사자의 근로환경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마지막 제 5장은 본 연구의 요약과 정책시사점이다.

## 2 분석자료와 플랫폼종사자 정의

이 논문이 플랫폼종사자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해 활용한 자료는 2021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실태」이다. 이 자료는 「주민등록연앙인구」(2021년 5월)의 15~69세를 모집단으로 하고, 성, 연령(10세), 특·광역시도를 할당변수로 설정하여 모집단 층별 비율과 비례하도록 층별 목표표본 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5만 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다.<sup>4)</sup>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노동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유급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연결되는 고용형태’(OECD, 2019)로 정의된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통해서 플랫폼종사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7월에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TF」에서 제시된 플랫폼노동을 정의하는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플랫폼종사자를 정의한다.<sup>5)</sup> 이 네 가지 조건은 첫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소개, 중개, 알선)되는 것이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일 것,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일감)를 구할 것, 셋째, 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해야 할 것, 넷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감(일거리)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본고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된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를 기준으로 지역 간 플랫폼노동시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기준으로 정의된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이하 플랫폼종사자) 수는 15-69세 취업자 25,885천 명(2021년 8월 기준)의 2.6%에 해당하는 661천 명이다.<sup>6)</sup>

4)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실태」의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조사항목 등 세부 내용은 김준영 외(2021)를 참고할 수 있다.

5) 장지연·정민주(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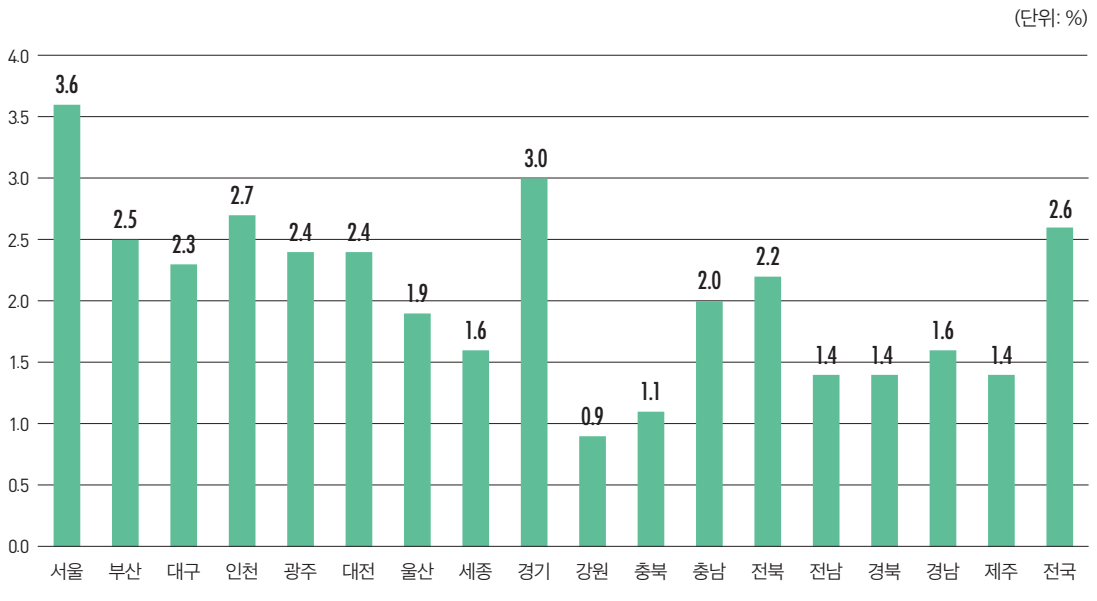
6) 김준영 외(2021)는 플랫폼종사자를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와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위의 일자리위원회 기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일자리위원회의 네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이 두 정의 중에서 본고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만을 분석대상으로 다룬다. 그 이유는 광의의 플랫폼종사자가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다수는 구인공고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공지하는 ‘게시판’ 역할을 할 뿐이며 플랫폼종사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지역별 플랫폼종사자 규모

플랫폼종사자는 농어촌·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여, 대도시 중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플랫폼종사자 수는 플랫폼종사자 전체의 2/3에 가까운 433천 명이다. 특·광역시도 중에서 플랫폼종사자가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서울이 3.6%로 가장 높다. 서울의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전국 평균인 2.6%에 비해 1.0%p가 높고, 플랫폼종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강원(0.9%)에 비해서는 약 4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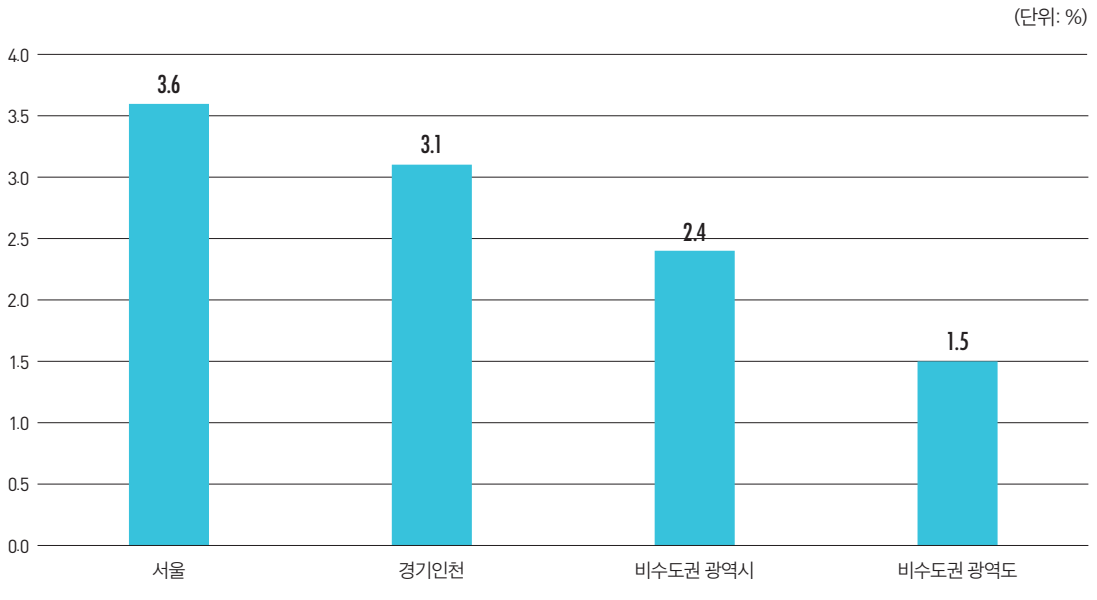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서울 외에 경기(3.0%), 인천(2.7%), 부산(2.5%), 광주(2.4%), 대전(2.4%)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비교적 높다. 반면 경기를 제외한 강원, 제주, 경북, 전남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플랫폼종사자 비율이 2% 미만으로 낮다.

그림 1 특·광역시도 별 플랫폼종사자 비율(2021년)



주: 15-69세 취업자 중에서 플랫폼종사자 비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1),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실태」

그림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플랫폼종사자 비율(2021년)



자료: [그림1]과 같음

지역을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서울이 3.6%, 경기·인천이 3.1%, 비수도권 광역시는 2.4%이며 비수도권 광역도는 1.5%로 가장 낮다.

표 1 플랫폼종사자의 주·부업 유형별 비중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	전국 평균
주업형	43.5	44.6	52.7	53.2	47.2
부업형	41.5	40.4	38.6	34.9	39.4
간헐적 참가형	14.9	15.1	8.7	11.9	13.4

플랫폼노동에 참여하여 버는 수입 수준과 플랫폼노동 참여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플랫폼종사자를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업형’은 플랫폼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반면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주당 20시간 이상인 자로, ‘부업형’은 플랫폼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총수입의 20~50%이면서 플랫폼노동에 주당 10~20시간 참여하는 자로 정의한다. 마

지막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총수입의 20% 이만인면서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주당 10시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sup>7)</sup>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플랫폼종사자 비율 자체는 낮으나 플랫폼노동에 생계비 대부분을 의존하는 '주업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네 지역 중에서 '주업형'의 비율은 비수도권 광역도가 53.2%로 가장 높고 비수도권 광역시도 52.7%로 비교적 높다. 한편 서울과 경기·인천은 '주업형' 비율이 각각 43.5%와 44.6%로 비수도권 광역도에 비해 약 8~9%p가 낮다. 이와는 달리 '부업형'과 '간헐적 참여형'의 비율은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비교적 높다.

표 2 지역별 플랫폼종사자의 직종 분포

(단위: %)

순위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		전국 평균	
	직종	비율	직종	비율	직종	비율	직종	비율	직종	비율
1	배달·배송·운전	73.1	배달·배송·운전	77.4	배달·배송·운전	74.2	배달·배송·운전	79.3	배달·배송·운전	76.0
2	전문서비스 (번역·강사·상담 등)	10.6	전문서비스 (번역·강사·상담 등)	7.8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8.1	전문서비스 (번역·강사·상담 등)	6.6	전문서비스 (번역·강사·상담 등)	8.1
3	가사·청소·돌봄	4.6	가사·청소·돌봄	4.8	전문서비스 (번역·강사·상담 등)	6.2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6.4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4.8
4	미술 등 창작활동	4.1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3.5	가사·청소·돌봄	4.5	미술 등 창작활동	2.6	가사·청소·돌봄	4.3
5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3.4	IT 관련 서비스	2.6	미용·세탁·장례 등 개인 서비스	2.6	가사·청소·돌봄	2.5	미술 등 창작활동	2.9

주: 플랫폼종사자 중에서의 비율(%임)

7) 플랫폼종사자의 주·부업 구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총소득 중 플랫폼노동 참여로 얻는 수입 비율	플랫폼노동 참여 주당 노동시간	10시간 미만	주당 10~19시간	20시간 이상	무응답, 결측
	25% 미만		간헐적 참가형	부업형	부업형
25~50%		부업형	부업형	주업형	부업형
50% 이상		부업형	주업형	주업형	주업형
무응답, 결측		간헐적 참가형	부업형	주업형	제외

주: 김준영 외(2021), Urzi et al.(2020), 15p 참고하여 작성

플랫폼종사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네 지역 모두 공통으로 '배달·배송·운전' 직종 종사자 비율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동 직종의 비율은 비수도권 광역도가 79.3%로 가장 높다. 한편 '배달·배송·운전' 외의 직종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비수도권은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다.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종사자 규모는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두 번째(8.1%)로 높고, 비수도권 광역도에서는 세 번째(6.4%)로 높다. 이는 데이터 입력과 같은 저숙련·단순 작업 웹기반형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공간적 제약이 없어 비수도권에서도 비교적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는 '가사·청소·돌봄' 직종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 직종이었던 가사도우미, 청소도우미, 간병인 등의 직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플랫폼노동화(化)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4 지역별 플랫폼종사자 근무실태

### 수입

플랫폼종사자가 플랫폼 일거리를 수행하여 번 월평균 수입(B)의 전국 평균은 123.1만 원으로 월평균 총수입(A)인 199.4만 원의 61.7%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플랫폼 일거리로 번 수입(B)과 총수입(A) 모두 비수도권 광역도가 각각 218.4만 원과 145.2만 원으로 가장 많다. 비수도권 광역도 외의 다른 세 지역의 경우 플랫폼 일거리로 번 월평균 수입(B)이 117~12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총수입 중에서 플랫폼 일거리로 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B/A)은 비수도권 광역시가 69.2%로 비교적 높고 경기·인천이 55.6%로 가장 낮다.

표 3 지역별 플랫폼종사자의 수입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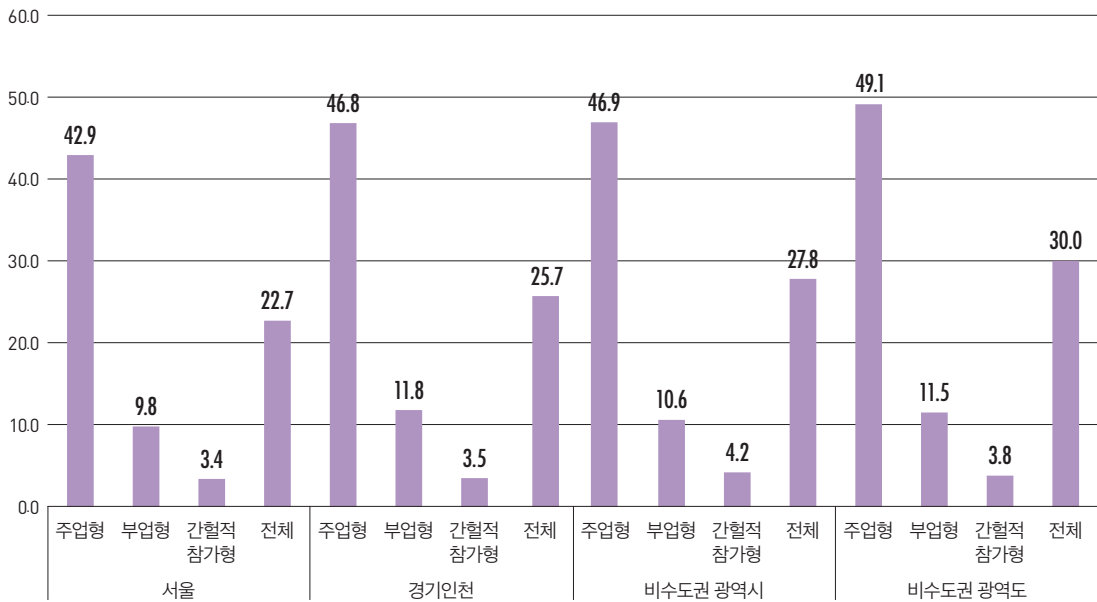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	전국 평균
총수입(A)	192.2	215.6	172.3	218.4	199.4
플랫폼일거리로 번 수입(B)	116.5	119.8	119.3	145.2	123.1
비율(B/A)	60.6	55.6	69.2	66.5	61.7

## 노동시간

네 지역 중에서 비수도권 광역도가 플랫폼 일거리로 번 수입(B)이 가장 많은 것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앞 절에서 본 것처럼 비수도권 광역도는 네 지역 중에서 ‘주업형’ 플랫폼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플랫폼일거리로 번 수입(B)은 플랫폼일거리에 참여하는 시간이 긴 ‘주업형’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늘어나게 된다. 둘째, 비수도권 광역도는 네 지역 중에서 플랫폼일거리에 참여하는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 플랫폼일거리에 참여하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비수도권 광역도가 30.0시간으로 가장 길고, 서울(22.7시간)보다는 7.3시간이 길다. ‘주업형’ 종사자만을 비교하더라도 비수도권 광역도는 플랫폼일거리에 참여하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9.1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서울(42.9시간)에 비해 6시간 이상이 길다.

그림 3 주·부업 유형별 플랫폼일거리 참여 주당 평균노동시간

(단위: 시간)





## 사회보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29.1%이며, 50.4%는 미가입, 20.4%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2021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5.2%<sup>8)</sup>인 것과 비교하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임금근로자의 약 1/3 수준이다.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경로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였다는 응답이 12.2%,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하였다는 응답이 8.8%이다. 자영업자 임의가입 등 '기타(자영업자 임의가입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도 8.1%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수도권 광역도(31.2%), 서울(30.3%), 비수도권 광역시(28.0%), 경기·인천(27.9%)의 순으로 높으나 지역 간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비수도권 광역도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하였다는 응답이 5.0%로 네 지역 중에서 가장 낮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였거나 '기타(자영업자 임의가입 등)'의 방법으로 가입하였다는 응답은 각각 15.0%와 11.3%로 가장 높다. 이는 비수도권 광역도에 거주하는 플랫폼종사자의 비교적 높은 고용보험 가입은 노동플랫폼의 적극적인 사회보험 제공 노력과는 무관한 결과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이 11.9%로 가장 높다.

표 4 지역별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

(단위: %)

	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	전국 평균
가입	30.3	27.9	28.0	31.2	29.1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	11.9	8.8	7.8	5.0	8.8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	13.1	11.6	9.7	15.0	12.2
기타(자영업자 임의가입 등)	5.3	7.5	10.6	11.3	8.1
미가입	47.7	50.1	50.9	55.0	50.4
모름	22.0	22.0	21.1	13.8	2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2021년 8월)

산재보험의 경우 플랫폼종사자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1%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32.0%로 가장 높고 비수도권 광역도가 27.8%로 가장 낮다. 비수도권 광역도의 경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 비율이 9.2%로 네 지역 중에서 가장 낮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1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 비율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한 가입’ 비율보다 높은 다른 세 지역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즉, 비수도권 광역도는 앞에서 살펴본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노동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리나라 플랫폼종사자의 75% 이상이 부상위험이 큰 배달·배송·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광역도는 물론 다른 지역도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력이 시급하다.

표 5 지역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상태

(단위: %)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	전국 평균
가입	29.9	32.0	28.4	27.8	30.1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	15.8	17.3	14.3	9.2	15.0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	14.1	14.7	14.2	18.5	15.1
미가입	41.9	44.7	46.6	53.7	45.8
모름	28.2	23.3	25.0	18.5	24.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플랫폼종사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플랫폼 일을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으로 ‘보수 미지급’이 22.0%로 가장 높고, 이어서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18.1%), ‘사전 협의 없는 수당/보수 삭감’(16.0%), ‘앱/웹의 이용 일시 정지 및 차단’(15.2%) 등도 비교적 응답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사전 협의 없는 수당/보수 삭감’(17.0%), ‘앱/웹 이용의 일시 정지 및 차단’(16.9%), ‘성희롱/성추행’(9.1%)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비수도권 광역시는 ‘앱/웹 이용의 일시 정지 및 차단’(18.2%), ‘계약/등록 강제 해지’(11.3%),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19.5%)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수도권 광역도의 경우 '계약 이외 업무 배당'(18.1%), '계약/등록 강제 해지'(10.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19.0%) 등의 응답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요약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계약/등록 강제 해지'와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6 플랫폼 일을 하면서 어려움 경험 비율

(단위: %)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	전국 평균
보수 미지급	19.8	23.8	22.5	20.8	22.0
계약 이외 업무 배당	15.1	16.2	10.5	18.1	15.2
사전 협의 없는 수당/보수 삭감	17.0	16.7	16.5	11.9	16.0
앱/웹 이용 일시 정지 및 차단	16.9	12.6	18.2	15.5	15.2
계약/등록 강제 해지	7.0	6.7	11.3	10.2	8.2
폭언 등 모욕적 언행	14.0	12.5	11.5	12.9	12.8
성희롱/성추행	9.1	5.5	4.3	3.3	5.9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	17.0	17.8	19.5	19.0	18.1

주: 음영은 플랫폼종사자가 경험한 어려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표기한 것임

## 5 요약과 시사점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플랫폼종사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8월 기준 우리나라 플랫폼종사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는 661천 명이며 이 중에서 65.5%인 433천 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가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3.6%로 가장 높고, 경기(3.0%)와 인천(2.7%)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비수도권 광역도는 플랫폼종사자 비율이 1.5%로 서울과 경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강원은 플랫폼종사자 비율이 0.9%로 서울의 1/4 수준으로 낮다.

둘째,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낮으나 수입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 '주업형' 종사자 비율은 약 53%로 수도권보다 약 8%p가 높다. 서울은 생계 목적이 아닌 취미에 가까

운 형태로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간헐적 참가형’ 종사자 비율이 약 15%로 네 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

셋째, 플랫폼일거리 참여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비수도권 광역도가 30.0시간으로 가장 길고 서울은 22.7시간으로 가장 짧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도의 ‘주업형’ 플랫폼종사자는 플랫폼일거리 참여 노동시간이 주당 평균 49.1시간으로 가장 길다.

넷째, 직종별 분포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배달·배송·운전’ 직종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다. ‘배달·배송·운전’ 외에는 비수도권은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관련 직종이, 수도권은 가사·청소·돌봄과 같은 여성 중심 직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별 특징이 나타난다.

다섯째,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에 있어 지역 간에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비수도권은 서울과 경기·인천에 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낮다. 이는 비수도권은 사회보험 제공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섯째, 플랫폼종사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보수 미지급’(22.0%),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18.1%)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사전 협의 없는 수당/보수 삭감’(17.0%), ‘앱/웹 이용 일시 정지 및 차단’(16.9%)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비교적 높다. 비수도권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계약/등록 강제 해지’와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을 경험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주업형’ 플랫폼종사자 비율이 높고, 근로시간이 길며, 플랫폼의 사회보험 제공 역할이 미흡하다. 플랫폼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종사자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자치단체의 핵심 역할은 상시적인 노동·생활 문제 상담, 부당대우 신고접수, 법률지원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음식배달원과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종사자는 일하는 시간 대부분을 도로에서 이동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보내고 있어 자치단체가 일과 시간 중에 제공하는 상담·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모빌리티 플랫폼종사자 지원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 상담·지원 창구를 설치하여 건강, 법률·노무, 주거·금융·복지 등 생활 전반과 이직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이나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 수행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플랫폼종사자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다. 플랫폼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 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일시적으로 부담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플랫폼종사자를 비롯한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무시간이 길고 사고나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업형' 플랫폼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유급병가와 유급휴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는 플랫폼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는 날에 하루분의 최저(생활)임금과 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플랫폼종사자가 입원으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입원 기간의 일정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이나 자치단체가 정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치단체가 플랫폼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플랫폼종사자는 일을 안 하면 수입을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경제적 강제로 인해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휴식 없이 연속으로 일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유급휴가를 연 2~4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준영·장재호·김강호·박상현(2021),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로환경」, 고용동향브리프 2021년 제 9호, 한국고용정보원.
- 장지연(2020),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고용노동브리프 제 104호,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정민주(2020), 「플랫폼노동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 설문방안 검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 ILO(2021),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1: The rol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ransforming the world of work*,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 OECD (2019),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OECD Publishing, Paris.
- Pesole, A., U. Brancati, M.C. Fernández-Macías, E. Biagi, & F. González Vázquez, I. (2018), *Platform Workers in Europe*, EUR 29275 E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2018
- Urzì B., C., Pesole, A., Fernández-Macías, E.(2020), *New evidence on platform workers in Europe. Results from the second COLLEEM survey*, EUR 29958 E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2020



## 지역사례

---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 신현욱
- 대구시 주력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전환 추진방향 | 최원옥
- 미래차시대로 대전환 대응,  
경북의 일자리 정책 | 박동현

## ■ 지역사례 1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신현욱 |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기업과 인재 유출에 따른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였다. 이에 부울경은 행정적 통합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의 경제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초광역권 연합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출범시켰다.

특별연합은 3개 분야(산업, 인재, 공간)로 나누어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 현안 및 시급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협력·연계·상생형 그린 스마트경제 메가시티 구현을 추진하고, 인재분야에서는 전략산업과 인재의 동반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초광역권 구축을 추진한다. 공간 분야에서는 전략산업 성장거점 확충 및 연결로 메가시티 공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부울경은 실질적인 단일 경제생활권,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지역 인프라 개선, 전략산업의 통합 및 고도화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1. 지역연황 및 추진배경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하 부울경)는 수도권으로 인력 유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고착화 그리고 산업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3개 지역 모두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sup>1)</sup> 이

1) GDP비중: 1998년 수도권: 46.7%, 부울경: 17.9%→2020년 수도권: 52.5%, 부울경: 13.9%



러한 위기로 인해 부울경 모두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정체·악화<sup>2)</sup>되어 지역 역량과 경제 활력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 인재양성 체계와 산·학·연 협력기반 등의 부족으로 유망 신산업·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sup>3)</sup>된 수도권으로 부울경 지역 인재 유출이 늘어나고, 노후화된 제조 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인해 산업 경쟁력도 낮아지고 있다.<sup>4)</sup>

이에 부울경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을 합의하였고, 각 지역 연구원에서 2020년 3월에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부터 시작하여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을 구성, 2022년 4월에 부울경 각 의회에서 「부산을 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안을 의결한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 각 시도 고시를 통해 설립 절차가 완료되었다.

## 2. 부산을산경남특별연합

부산을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은 교통, 환경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별연합은 2021년 4월 부울경 지자체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하여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 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진해야 하는 협력사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담은 '초광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향후 2022년 하반기에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를 선정하고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의 출범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총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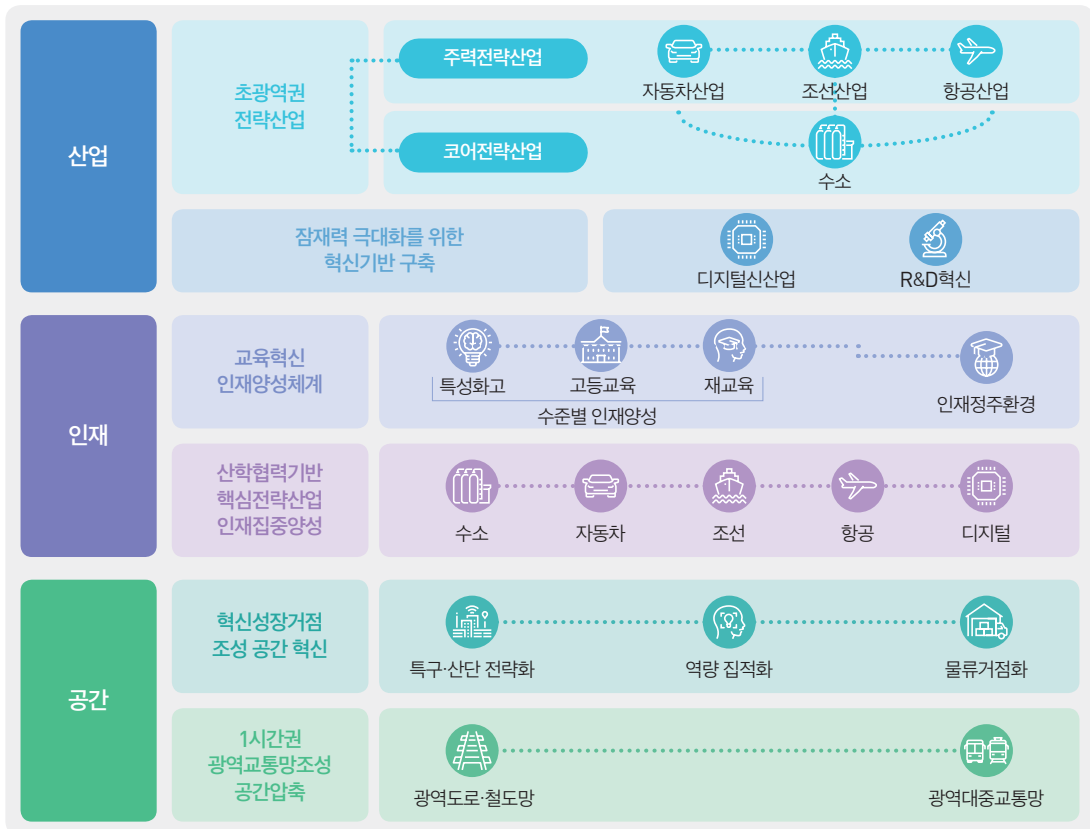
2) 광공업생산지수: 2014년 100.8→2019년 94.0/수출액: 2010년 142,138백만 달러→2019년 122,807백만 달러

3) 2015년~2020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소프트웨어, 영상방송, 연구개발전문서비스) 종사자 시도별 증감  
부산→수도권: 2016년 9.3%→2018년 15.5%, 부울경→수도권: 2016년 0.4%→2018년 15.2%

4) 부울경 4대 국가산단 생산 감소액은 전국 국가산단(38개) 생산 감소액(3조원)의 59.4%를 차지



그림 2 부울경특별연합 발전전략(경상남도 누리집)



첫 번째, 「산업」 분야는 권역 내 분야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상생형 산업체계 구축, 신속한 산업 체질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확보, 디지털 대전환과 초광역 R&D로 전략산업 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산업 인프라와 전후방 산업, 탄소중립 등 글로벌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역만의 전략산업이 아닌 초광역권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인재」 분야는 인재 미스매치 극복을 위한 산업별·수준별 인재 양성 기반 구축 및 인재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근무, 정주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수소, 자동차, 조선, 항공, 디지털 각 분야의 학사 개편 및 재교육·전환 교육, 산학연계를 통한 핵심 인재 양성과 전략산업 맞춤형 고졸 인력양성, 초광역형 공유대학 활성화 등을 통한 수준별 인재 양성으로 특화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하여 캠퍼스 내 유휴공간 활용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산업-교육-주거-문화 고밀도 융합환경을 조성하는 등 인재 친화적인 정주 환경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공간」 분야는 전략산업 성장거점 재구조화를 통한 공간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초광역권 전략 산업-물류-인재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 생활권 확장 통행 수요에 대응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초광역권 도심 내 융·복합 공간 조성, 기존 혁신도시 연계 초광역형 혁신클러스터 확대, 물류망의 첨단화·스마트화를 통한 공간혁신,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위해 대중교통망을 포함한 도로·철도망 등의 확충을 통해 부울경 산업·생활 거점 간 연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광역·대중교통망이 개선된다면 부울경이 공간적으로 압축되어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주민생활권과 일자리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인재」, 「공간」 발전계획 3개 분야는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초광역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단기일 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 추진되는 ‘1단계(선도)사업’과 사업의 구체화를 거쳐 타당성 분석 및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2~3단계사업’으로 전략적 및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1) 산업분야

구분	단계	주요내용
자동차	1단계	•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단계	• 친환경 수송기비용 전력변환모듈 개발플랫폼 구축 등
	3단계	• 다중 자동차 충전 플랫폼 개발 및 실증화 등
조선	1단계	• 친환경 선박 전 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 등
	2단계	•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 등
	3단계	• 극저온 연료탱크 소재 국산화 및 제조공정 스마트화 등
항공	1단계	•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2단계	• 동남권 UAM 실증센터 구축 및 시범 운영 등
수소	1단계	• 부울경 수소 광역버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등
	2단계	• 탄소중립 종합기술원 건립 등
	3단계	• CCU기반 수소 청정 생산플랫폼 기술 개발·실증 등
디지털	1단계	• 부울경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등
	2단계	• 5G 특화망 기반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확산 등

## (2) 인재분야

구분	단계	주요내용
인재양성	1단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2단계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부울경 캠퍼스 구축
정주환경 조성	1단계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 (3) 공간분야

구분	단계	주요내용
성장거점	1단계	• 초광역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
	2단계	• 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3단계	• 초광역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	1단계	• 동김해IC-부산 식만 JCT 광역도로 건설 등
	2단계	•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등
	3단계	• 울산-부산-창원을 잇는 철도교통(GTX) 인프라 도입 등
대중 교통망	1단계	•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환승할인제) 도입 등
	2단계	• 부산 하단-진해 용원 광역 BRT
	3단계	• 광역급행버스 및 급행버스체계 도입

## 4.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최근 조사된 「부울경 특별연합 주민인지도 설문조사」<sup>5)</sup> 결과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86.4%)’가 ‘필요하지 않다(13.6%)’보다 높은 응답을 보여 초광역권 특별연합 출범에 지역민은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우선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업은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48.6%)’,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28.9%)’, ‘미래전략사업(10.5%)’, ‘지역인재양성 프로젝트(7.3%)’ 순으로 조사되었다.

5) 「부울경 특별연합 주민인지도 설문조사」(부울경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2022. 1. 25~2. 5.)

응답: 부울경 지역주민 2,005명(부산 888명, 울산 288명, 경남 829명), 방식: 온라인과 전화방식,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2.2%

특별연합의 출범 후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지역균형발전(29%)', '일자리 창출(22.8%)',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17.8%)' 순으로 나타나 지역 인프라와 일자리 환경 개선을 특별연합의 기대효과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별연합의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 및 난관으로 '지역·지자체 간 갈등(37.4%)', '중앙정부 지원 부족(22.6%)', '지역발전 불균형(19%)',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역효과(12.7%)' 순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지역이기주의 같은 문제가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부울경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 특별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기존에 유기적인 보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부울경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신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확산하고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울경 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 특별연합 차원의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 단위 훈련사업이나 기존 행정단위 중심의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등은 권역단위(부울경)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질적 단일 경제·생활권,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별연합은 행정적 통합을 우선하기보다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연합을 통해 지역 인프라 개발, 산업의 고도화, 인재양성 등을 공동 대응함에 따라 지역 기업 및 인재 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역사례 2

## 대구시 주력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전환 추진방향

최원옥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 중 고용의 노동수요 구성이 변화한다. 즉, 노동의 유입과 유출에서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으로는 노동 유입(inflow) 현상이 나타나고, 정체 또는 사양 산업에서는 노동 유출(outflow) 현상이 나타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유입과 유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역에는 대량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일자리의 생태계 기반 약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후유증이 장기화할 수 있다.

대구지역 제조업은 2005년을 기점으로, 섬유산업의 위축, 기계·금속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약진으로 산업구조가 변모하였다. 지역 제조업의 최대 주력업종인 섬유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고, 기계·금속 및 자동차부품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고용상황의 변화로 전이되는데, 저부가가치의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노동 유출이 나타나고, 반면에 고부가가치의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기계·금속 분야는 노동 유입 현상이 나타난다.

대구지역 일자리전환 추진방향은 자동차부품의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 섬유산업의 구조적 문제해결과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로의 산업고도화 등 산업특성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일자리 정책 간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H/W적 시책과 S/W적 시책의 연계·통합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큰 틀에서 일자리전환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노동 유입이 발생하는 신산업 분야로 일자리 이동경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연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전환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산업 전환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지원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전직 배치 고용서비스 지원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지역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대규모 노동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전환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수며, 핵심 지원수단인 고용서비스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력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지도에 대한 연구와 노동의 유입-유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 1. 서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 중 고용의 노동수요 구성이 변화한다. 즉,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으로는 노동 유입(inflow) 현상이 나타나고, 정체 또는 사양 산업에서는 노동 유출(outflow)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유입과 유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역에는 대량실업,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다가올 수 있으며, 지역 일자리의 생태계 기반 약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후유증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산업, 전통산업 등의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차원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다양한 일자리수단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대구지역 주력산업의 변화와 노동이동

대구지역 제조업은 2005년에 들어, 섬유산업의 위축, 기계·금속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약진으로 산업구조가 변모하였다. 섬유산업이 지역 제조업의 최대 주력업종이었으나 그 비중이 감소하고, 기계·금속 및 자동차부품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지역 제조업이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바뀌고, 완제품 위주에서 원부자재 및 부품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표 1 대구지역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연평균 증가율
섬유·의복	34.6	15.4	15.3	13.5	11.3	-2.7
기계·금속	22.8	29.4	35.7	34.8	37.8	6.3
자동차부품	14.3	17.4	17.6	18.8	17.2	4.5
전기·전자 정밀기계	5.8	6.0	7.3	7.3	8.8	0.4
기타	22.5	31.8	24.1	25.6	24.9	8.2
제조업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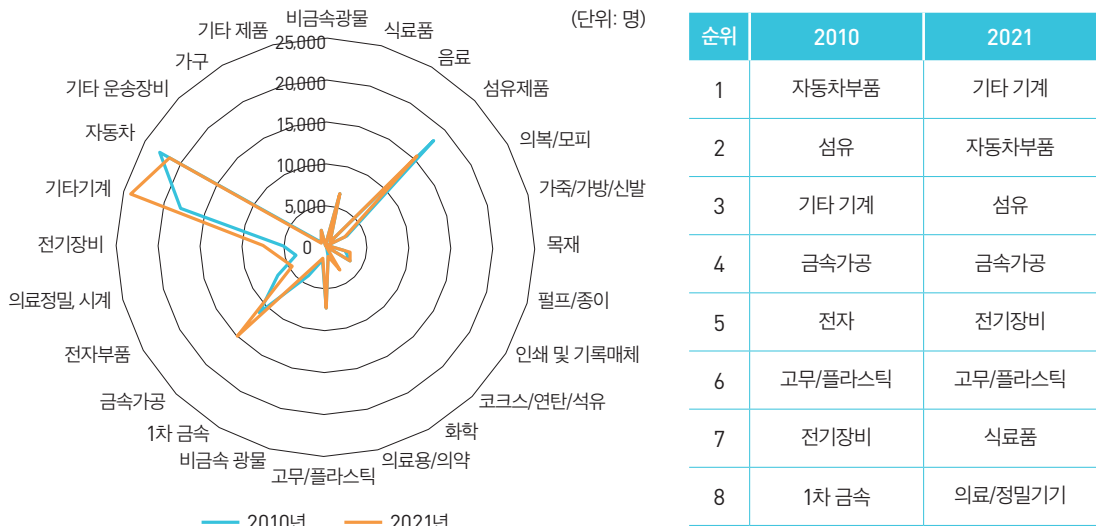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22.



한편, 2010년 대구지역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2만 2,601명), 섬유(1만 7,906명), 기타기계(1만 7,879명), 금속가공(1만 1,172명) 등의 순이었으나, 2021년에는 기타기계(2만 4,150명), 자동차부품(2만 1,379명), 섬유(1만 5,046명), 금속가공(1만 4,793명) 등의 순으로 순서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고용상황의 변화는 저부가가치의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노동 유출이 나타나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의 기계·금속 분야는 노동 유입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동차부품 산업은 부가가치와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미래형자동차(자율차, 전기차)'등으로의 신산업 전환과정에 대응하지 못해 노동의 유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대구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피보험자 수 비교(2010 v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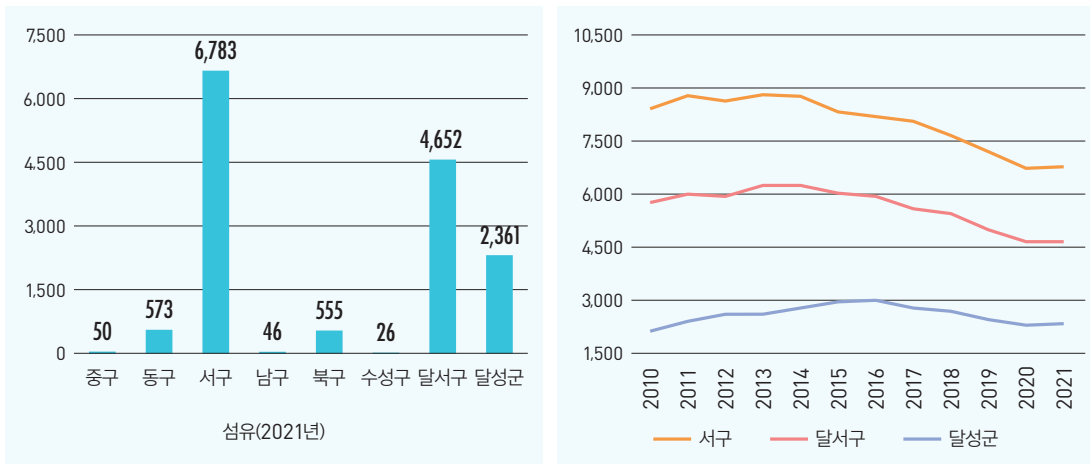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고용행정통계, 2022.

대구지역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섬유와 자동차부품 산업의 입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섬유산업은 서구(6,783명), 달서구(4,652명), 달성군(2,361명) 순으로 고용규모가 크고, 이들 3개 지역은 지역 내 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대구지역 섬유 피보험자 수 현황(2010~2021): 서구, 달서구, 달성군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고용행정통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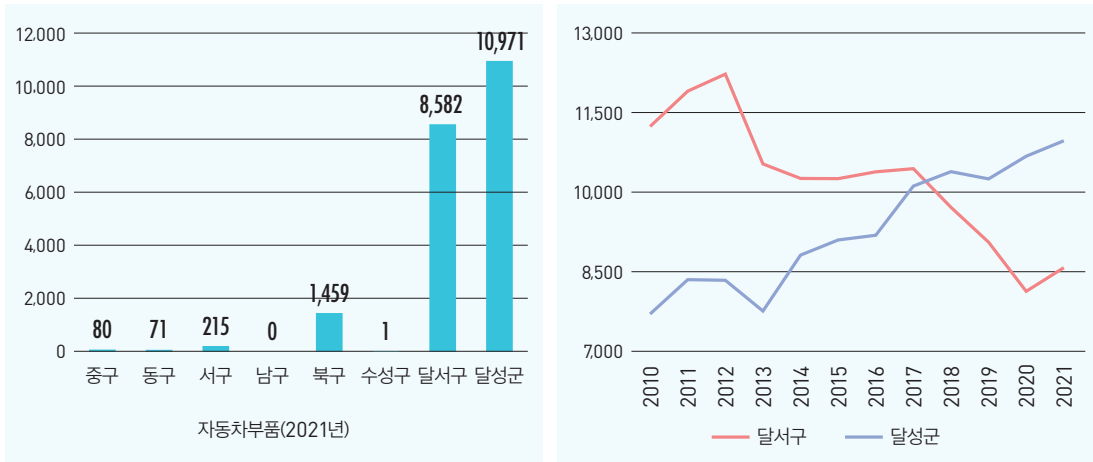
섬유산업 종사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50대(39.6%), 40대(21.4%), 60대(19.8%) 등이 핵심 연령층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40~50대 중장년층 중심으로 인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섬유기업의 경영난과 구조조정에서 기인한다.

그동안 대구의 섬유산업은 오랜 역사적 전통,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으로 우리나라 섬유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생산설비 노후화, 기술개발 부족에 따른 기술혁신역량 미흡,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 열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으로 지역 노동시장에서 노동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달성군(10,971명), 달서구(8,582명) 순으로 고용 규모가 크고, 이들 2개 지역은 지역 내 고용 규모 중 91% 비중을 차지하며 편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부품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유입-유출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나는데 달서구는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지역 내에서 고용 규모가 큰 지역이었으나, 2018년 기점으로 달성군의 고용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달서구의 성서일반산업단지를 대표하던 기업들 상당수가 달성군의 국가산업단지과 테크노폴리스로 이전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피보험자 수 현황(2010~2021): 달서구, 달성군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IS고용행정통계, 2022.

자동차부품산업 연령층은 40대(28.6%), 50대(27.2%), 30대(26.0%)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섬유 산업과 달리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고용 유지 중이다. 고용이 유지되는 이유는 내연기관 중심인 달서구에서 미래 자동차부품 중심인 달성군으로 노동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이동은 자동차부품 중견 기업들이 신산업 전환에 대비하여 대규모 공장부지 확보와 자율주행시험장 인프라 및 연구·생산시설 이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의 지원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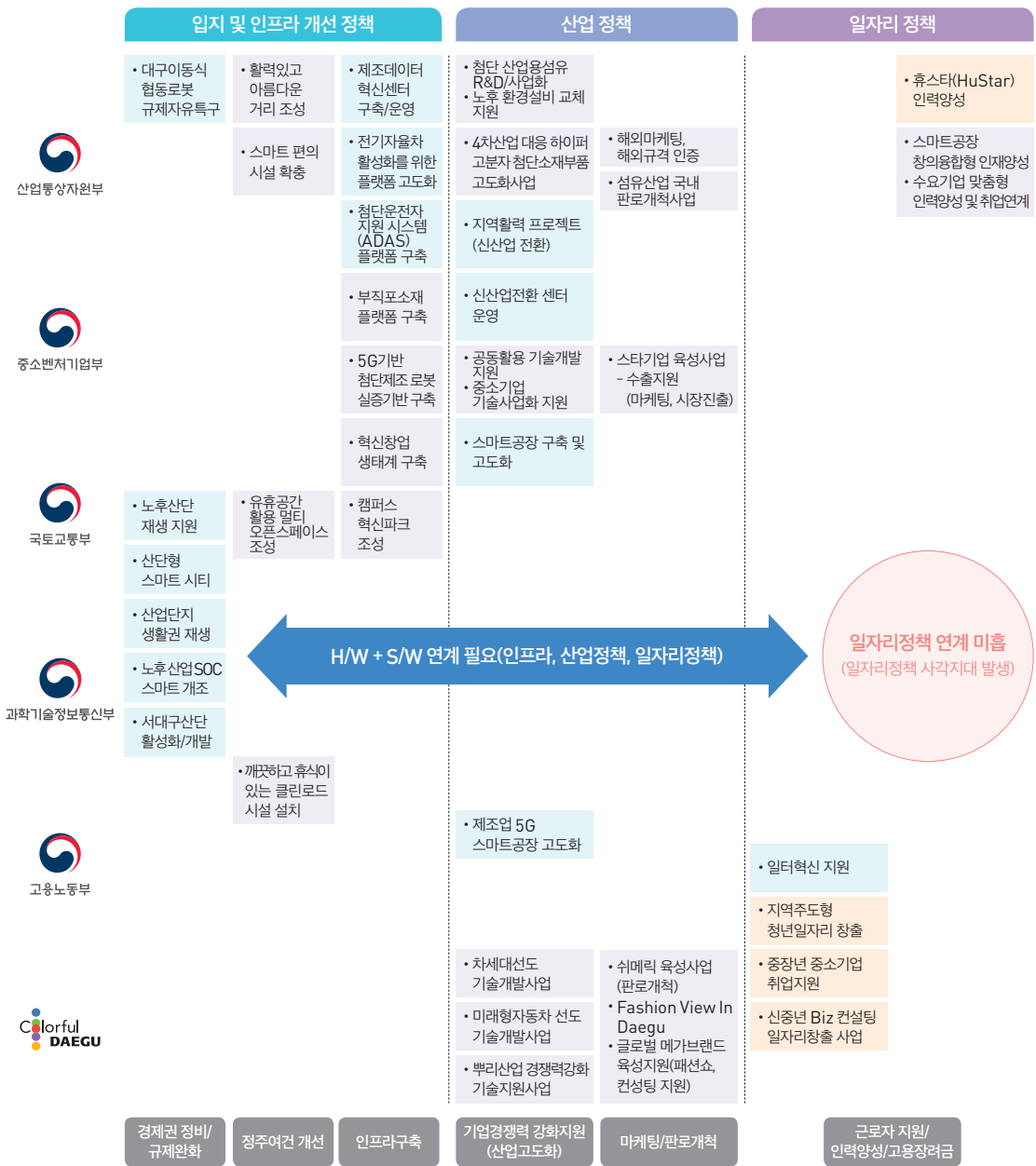
### 3. 대구시 산업-일자리 정책 연계성과 추진방향

그동안의 산업-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인프라 기반 조성 등 주로 H/W사업이 많아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 정책은 일자리의 기반(H/W)을 조성하고,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일자리지원(인력양성, 고용장려금, 근로환경개선 등) 수단(S/W)을 연계·구축하고 있으나, 산업-일자리 정책 간, 지원 사업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한편, 일자리전환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대구 노동시장 내 노동 유입과 유출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자동차부품산업은 탄소중립, 친환경자동차 시장 전환 등에 따라 노동의 유출-유입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前 산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섬유산업의 경우, 산업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노동유출이 발생 중이기 때문에 '위기 中 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부품의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 섬유산업의 구조적 문제해결과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로의 산업고도화 등 산업특성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의 H/W적 시책과 S/W적 시책을 결합하고 관련 산업 간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의 연계·통합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4 대구시 입지-산업-일자리정책 연계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전환 관련 사업 가운데 대구시가 유일하게 책임권한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휴스타(HuStar) 인력양성 사업이다. 현재 휴스타 사업은 대구시에서 선정한 5+1 신산업(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로봇, 에너지, 스마트시티)과 관련하여 산·학·연·관이 공동 협력하는 인력양성사업으로, 3,000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배출해서 지역에 정착시키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큰 틀에서 일자리전환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노동유입이 발생하는 신산업 분야로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경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연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전환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산업으로 전환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지원을 수행 중이다.

표 2 대구지역 주요 일자리전환 지원사업 현황

구분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비고
지역혁신프로젝트	●			△	· 일자리 패키지 지원
휴스타 인력양성				●	· 신산업 인력양성
지역주도형 일자리		●		△	· 인건비 지원
산업전환 지원센터			●	-	· 기업지원

주: 권한 비중이 큼(●), 권한 비중이 다소 작음(△)

그러나,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전직 배치 고용서비스 지원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지역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우선 (가칭)미래 신산업전환 노사상생협의체(안)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 노동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전환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수다. 고용서비스는 일자리수단 중 핵심적인 수단이기때문에 주력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지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력산업의 변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동태적 분석으로 노동의 유입과 유출의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이·전직 고용서비스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상담사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광역단위의 일자리전환 지원센터와 기초단위 일자리지원센터, 기업체 동향 및 구인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지역사례 3

## 미래차시대로 대전환 대응, 경북의 일자리 정책

박동현 |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고용전문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기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전기차 등의 미래차로 전환되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정권 출범과 함께, 국내 자동차분야 대기업도 미래차 분야로 과감한 투자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경북은 경주-영천-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이 정착되어 있으며, 5만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규모 산업지역이다. 친환경차, 전기차 등 미래차로 변화하면서 경북의 자동차부품산업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경북의 일자리 분야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산업 분야 기업유치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자동차부품산업의 안정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미래차산업의 전환에 대응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의 장기적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동력의 근간인 청년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1. 미래차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일자리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개발로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금지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관련 부품업체의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면, 미래차 시장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기타 미래차 분야 서비스 산업이 더욱 커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감소되는 일자리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정권 출범과 함께 최근 국내 대표적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 주력 계열사 3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전용라인을 증설하고, 로보틱스, UAM,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신제품과 기술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미래자동차산업 일자리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실현할 것으로 추측된다.<sup>1)</sup>

국내 대표적 완성자동차업체인 현대자동차는 향후, 전동화 기술의 선진화로 기존 내연기관의 추격자 역할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선도자로 도약할 포부를 가지고 있다. 또,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4차산업혁명, 인구 고령화 등 인간을 돕는 기술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 분야는 생산 위주의 인력에서 SW개발, 미래자동차 서비스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분야보다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 2. 경북의 자동차부품산업 상황

경북은 완성자동차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영천, 경산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수준의 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1,163개의 자동차부품분야 기업에서 5만 5천여 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1천억 원 이상의 매출기업이 29개로 전국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포항 국제항을 통해 해외 진출이 용이하고 영남대학교를 포함한 5개 대학에서는 자동차를 전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기지로써의 인프라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포항을 중심으로 발달된 1차 금속가공·소재분야와 기술적 연계가 가능하며, 미래자동차분야 핵심기술인 반도체, AI기술 등 구미를 중심으로 IT·전자부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타 산업과 생산연계성도 높다는 강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기업에 90% 이상을 납품하는 등 내수중심의 산업구조이며,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기에 따라 산업과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완성자동차기업의 미래차 분야 진출·확대가 가속화하면서, 경북 자동차부품기업에도 많은 일자리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자동차부품기업 200개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동차부품 기업의 66.5%가 미래차 전

1) 송충현, 삼성 450조, 현대차 63조, 롯데-한화 37조 “미래산업 투자”, <동아일보>, 2022.5.25.

환과 관련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42%가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재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많은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나, 조기에 잘 대응한다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경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대전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3. 경북 자동차부품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대표적 일자리 정책

#### 1)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먼저 경북은 현재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이 함께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경상북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① 산업-일자리-복지정책 통합접근을 위한 상생 거버넌스 구축, 경주-영천-경산 미래차 부품 특화 클러스트 구축으로 입지, 투자, 원가절감,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② 미래차 부품기술 허브센터 설치 등을 통해 미래차 부품개발 R&D 인프라를 구축하며, ③ 기업 간 Value chain을 통해 1차 및 2, 3차 협력업체와의 미래차 관련 신제품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 2) 경북지역혁신프로젝트 - 분야별 차별화된 기업지원 & 취업연계

또한, 경북은 지역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미래차 변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미래 자동차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전기장치, 배터리 등 향후 부품 수 증가가 예상되는 '확대군', 차체, 바디, 시트, 공조 등 미래차 전환에도 부품 수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군', 엔진부품, 동력전달장치 등 부품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감소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세 분야의 기업을 케어하기 위해 현재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으로 확대군, 유지군, 감소군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먼저 확대군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장기기, 배터리 등 향후 그 규모가 커지는 분야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발 빠른 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2) 영남대학교 전인교수, 자동차부품산업벨트의 대전환을 위한 경상북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발대식>, 2022.6.8.



위해서는 석·박사급 R&D 연구인력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그리고 개발된 제품의 유통처 발굴이 동시에 요구된다. 각종 전장,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 확대군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기업에 R&D 인력을 발굴, 매칭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전략 수립, 시험평가 등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동시에 지원한다. 여기서 채용된 R&D인력은 기술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함과 동시에, 과제에 요구되는 역량 향상을 위한 도제식 교육까지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족한 고급 전문인력 제공을,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성장애 따른 일자리 규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유지군을 지원하는 사업은 차체, 바디, 시트, 공조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 미래차 모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개 군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확대보다는 일자리 안정화 지원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산·품질 직군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활발한 매칭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기업에는 부품공정 고도화를 통해 부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

감소군을 지원하는 사업은 내연기관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 시 필요성이 사라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군, 또는 유지군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업종전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는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사장되는 부품 생산업에서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해 감소군 기업의 회생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 3) 지역혁신프로젝트 - 청년 지역 정착 특화 일자리 모델

마지막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의 장기적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동력 근간인 청년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청년인재스쿨'이라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의 도외 이탈 방지와 도내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경북청년인재스쿨'은 지역의 우수 청년들을 모집하여 입학-교육-수료 과정을 통해 온라인 교육, 지역 강소기업 직무 인턴십, 강소기업 인사담당자-청년 멘토링, 실전면접캠프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료 시 경북에서 직접 우수 청년임을 인증하는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별점은 경북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풀을 구성하여, 기업이 청년인재스쿨 참여자와 경북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게 다양하게 노출됨으로써, 청년이 자연스럽게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북의 대표적 정책이다.

#### 4. 경북 일자리 정책의 과제

경북의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유입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을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외 경북 자동차부품산업을 위해 추진해야 할 추가적인 정책적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경북은 미래자동차산업에 요구되는 ICT산업과 전자부품 산업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친환경 경차에 요구되는 배터리 분야는 최근 포항을 중심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점점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에 유치될 LG화학을 중심으로 생성될 전후방 기업들이 상생·협업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부품산업과 융합이 가능한 인프라를 활용한 전략이 일자리 정책에 녹아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지역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지역 내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관 협업을 통해 청년이 조기에 경북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촉과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 행정통계로 본 지역고용

- 고용행정통계로 살펴본 청년고용

『행정통계로 본 지역고용』은 고용보험 지표를 분석하여,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지역 또는 산업의 고용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자 안내

1. 본 『행정통계로 본 지역고용』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행정통계로 본 지역고용』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통계는 사업장 등록 시 신고된 소재지 및 산업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치입니다.

## 고용행정통계로 살펴본 청년고용

### 요약

- 2021년 청년 피보험자 수는 2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함
  - 전 연령 피보험자 증가율보다 0.7%p 낮은 수치이며, 전체 피보험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
- 남성의 늦은 경제활동 참가로 인해 다른 연령대보다 남성 피보험자 비중이 낮음
  -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낮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임금 격차가 심화됨
- 산업별 청년층 피보험자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피보험자 비중이 타 연령층보다 높음
  - 정보통신업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피보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청년층의 수도권 피보험자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신규 취업보다 이직자 이동에서 더 두드러짐

### □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sup>1)</sup> 현황

- 청년층 피보험자 수는 249만 명으로 전체 피보험자 중 17.1%를 차지함
  - 이 중 24세 이하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1.3%(78만 명)이며, 68.7%(171만 명)는 25세 이상 29세 이하 피보험자임
  - 전체 피보험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2021년 청년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함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청년 피보험자 증가율은 0.1%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에는 증가율을 회복함
  - 그러나 전체 피보험자 증가율(3.1%)에 비해 청년 피보험자 증가율은 낮은 편임
  - 24세 이하 피보험자 수의 증감률은 2021년 2.2%, 2020년에는 -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경

1) 청년층을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2021년 12월 기준 피보험자 현황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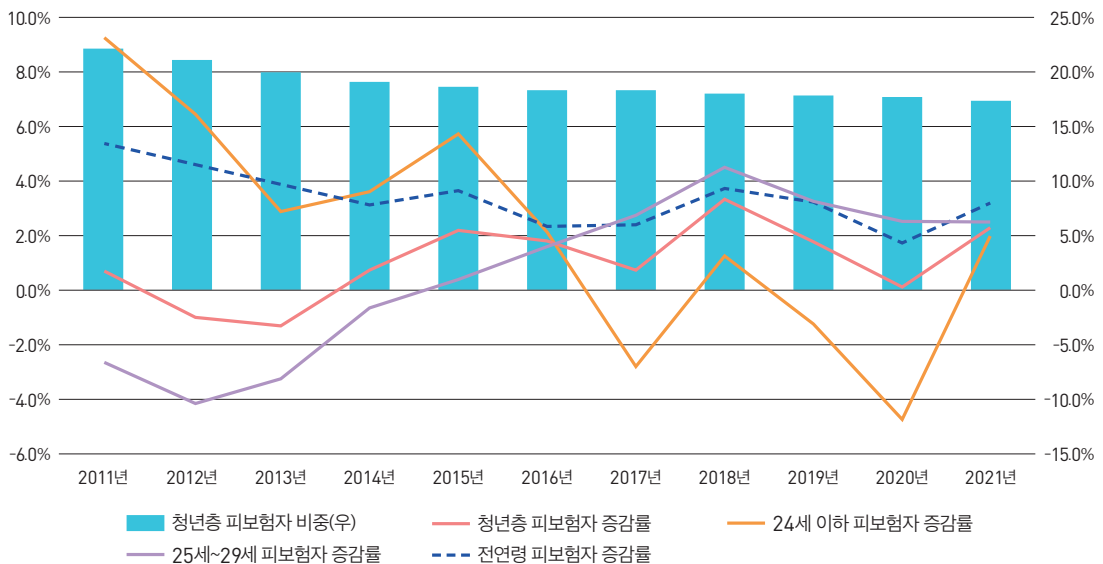
기 상황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5세 이상 29세 이하 피보험자 증감률은 2021년 2.4%, 2020년 2.5%를 기록함

○ 청년 피보험자 중 52.9%(132만 명)는 2021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인원임

- 이 중 37만 명은 2021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신규취득자이며, 94만 명은 고용보험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재취업자임

그림 1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2011년~2021년)



주: 피보험자 증감률은 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변화율임

자료: 고용보험DB

### □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성별 현황

○ 청년 피보험자 중 남성의 비중은 47.7%로 전 연령 남성 피보험자 비중(56.1%)보다 낮음

- 24세 이하에서 남성의 비중은 41.0%, 25세~29세 남성 피보험자 비중은 50.8%로 나타나, 남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로 인해 청년층 성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남성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3.2%, 여성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함

- 전년 대비 2020년 피보험자 증감률은 남성 -0.1%, 여성 0.3%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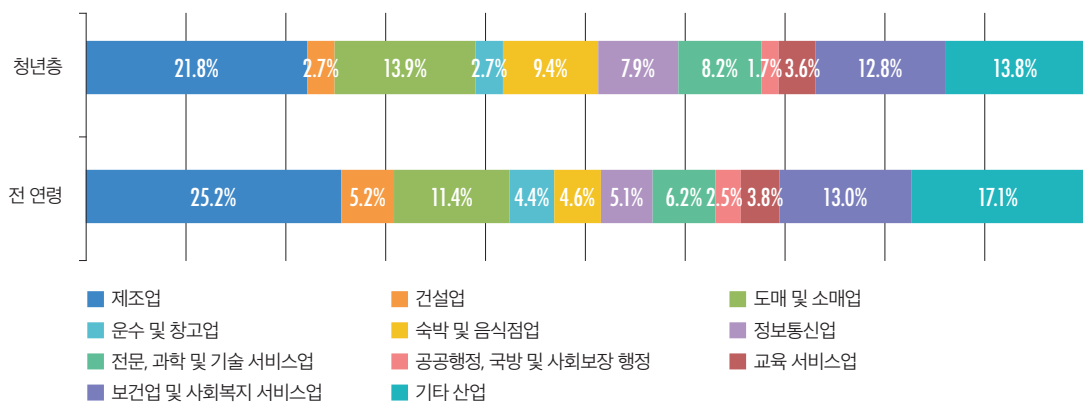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피보험자 수의 변동성이 여성보다 큼

- 남성의 평균임금<sup>2)</sup>은 여성보다 높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임금 격차가 심화됨
  - 청년층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90.9로 나타남
  - 24세 이하 여성의 상대임금은 94.9, 25세~29세 여성의 상대임금은 92.4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의 상대임금이 감소함

□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업별 현황

- 청년 피보험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숙박 및 음식점업 피보험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음
  - 나이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24세 이하에서는 단기일자리 위주인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피보험자 비중이 크고, 25세~29세 피보험자의 산업분포는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타 연령대보다 높음
  - 반면 제조업, 건설업 피보험자의 비중은 전 연령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2 산업별 피보험자 비중(2021년 12월)



자료: 고용보험DB

2)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서의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고용보험DB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다른 변수의 통제 없이 전체 청년층 피보험자 중 임금이 상위 1%, 하위 1%인 인원을 제외하고 평균임금과 상대임금을 계산하였음.

- 피보험자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정보통신업으로 전년 대비 12.5%(2만 2천 명) 증가했으며,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가장 낮은 피보험자 증감률(-7.9%)을 보임
  - 정보통신업 분야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피보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피보험자 증감률은 기저 효과로 인해 2021년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산업별 재취업 소요 기간을 비교<sup>3)</sup>한 결과, 산업별로 이직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문 이직자의 평균 재취업 소요일수가 짧았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문의 이직자는 재취업까지 평균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됨

표 1 산업별 이직자의 재취업 현황

주요 산업 간 이직 부문 (비중)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일)	재취업률		산업 내 이직 비중	주요 산업 간 이직 부문	
		90일	1년			
제조업 (C)	413.4	38.9%	65.9%	52.3%	G (12.0%)	N (6.1%)
도매 및 소매업 (G)	430.2	31.6%	61.9%	36.1%	C (13.7%)	I (8.8%)
숙박 및 음식점업 (I)	538.2	24.7%	53.3%	38.3%	G (13.1%)	C (10.8%)
정보통신업 (J)	327.6	42.8%	71.7%	42.4%	G (11.9%)	M (9.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276.4	44.3%	76.6%	33.4%	C (14.0%)	G (1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479.6	30.4%	60.6%	23.1%	C (16.0%)	G (1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403.6	30.6%	67.3%	20.8%	Q (12.1%)	C (11.3%)
교육 서비스업 (P)	262.1	44.0%	76.3%	39.8%	Q (9.0%)	J (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210.5	50.9%	82.2%	76.3%	G (3.6%)	O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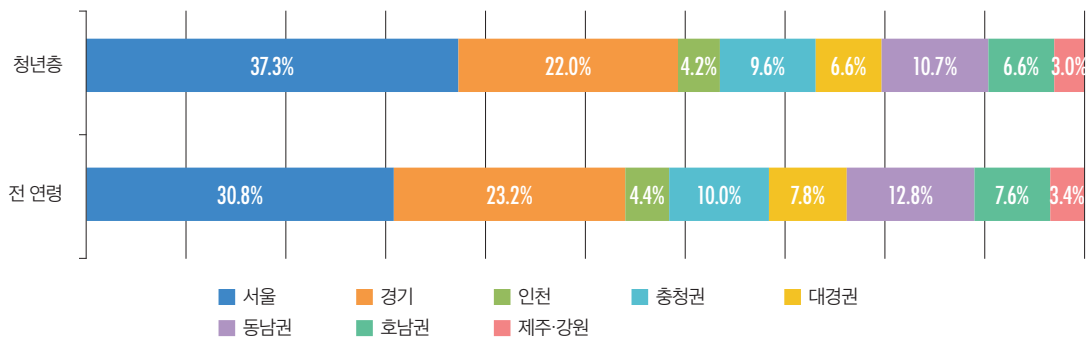
주: 1) 2021년 12월 피보험자 기준 2021년에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인원 중 상실-취득 정보가 정상 연결된 86만 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2) 산업 내 이직은 상실 당시 사업장과 취득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같은 경우로 정의함

3) 2021년 12월 피보험자 중 상실 연도와 상관없이 2021년에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상실 당시 종사 산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을 기준으로 수치를 비교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역별 현황<sup>4)</sup>

- 청년층 피보험자의 37.3%는 서울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30.8%)보다 서울 지역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2019년 이전까지는 서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피보험자 비중이 40% 이상이었지만, 2019년 39.3%, 2020년 37.8%로 최근 3년간 그 비중이 감소함

그림 3 지역별 피보험자 비중(2021년 12월)



자료: 고용보험DB

- 17개 시도의 청년층 피보험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세종, 전남, 충북에서 피보험자 증가율이 높았으며, 대전, 울산, 경남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함
  - 세종, 전남, 충북의 피보험자 증가는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 서비스업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충북에서는 식료품 제조업, 전남에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피보험자가 증가하였음
  - 울산과 경남은 2016년부터 지역 주력산업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피보험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여 피보험자 증감률이 낮게 나타남

4) 고용보험통계는 사업장 등록 시 신고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와는 다를 수 있음



표 2 17개 시도별 청년층 피보험자 증감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0.7	3.3	1.7	0.1	2.4	경기	3.2	5.2	2.4	3.1	4.2
서울	-0.2	2.2	0.3	-3.6	1.1	강원	2.6	6.5	5.4	6.3	3.6
부산	0.3	2.1	0.9	0.8	2.5	충북	4.2	6.2	7.8	1.8	4.7
대구	1.3	4.1	0.5	0.1	2.9	충남	3.1	1.0	2.4	1.7	2.7
인천	4.8	5.8	3.1	2.0	4.6	전북	-0.5	6.5	4.9	2.7	2.6
광주	1.6	5.3	2.7	4.8	3.8	전남	0.7	6.9	6.3	6.2	4.7
대전	0.6	5.3	5.4	7.7	-1.4	경북	0.4	0.5	-1.3	-1.3	3.2
울산	-8.6	-1.0	-0.1	2.0	-1.2	경남	-7.3	0.6	0.3	-0.8	0.0
세종	6.1	13.0	13.8	12.2	8.2	제주	12.2	3.9	4.5	2.7	1.3

주: 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계산함

- 2021년 12월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재취득자<sup>5)</sup>의 시도 간 이동을 살펴보면, 권역 내에서 이동과 서울(수도권)로의 유입이 두드러짐
  - 17개 시도 모두에서 역내 이동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 내 이동 비중은 서울 지역이 65.5%로 가장 높고, 세종이 35.3%로 가장 낮았음
  - 역외 이동에서는 서울로 이동하는 재취업자가 많고, 서울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서울 이동자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존재함
  - 고용보험 재취득자의 39.5%는 서울 지역으로 취업하였으며, 64.5%는 수도권 사업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의 서울 사업장 근무 비중은 34.6%(수도권 60.7%)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신규 취업자보다 이직자 이동에서 두드러짐

5) 2021년에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이력이 있고, 2021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3 고용보험 재취득자의 시도 간 이동

(단위: %)

후 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65.5	2.1	1.2	2.9	0.8	1.4	0.6	0.3	16.7	1.1	1.2	1.5	0.8	0.7	1.2	1.3	0.7
부산	15.7	61.3	1.3	0.6	0.3	0.7	2.3	0.1	4.6	0.4	0.5	0.7	0.2	0.8	1.5	8.3	0.6
대구	14.8	1.8	59.2	0.8	0.3	1.0	1.1	0.2	5.4	0.6	0.9	0.8	0.3	0.3	10.3	1.8	0.4
인천	26.8	0.8	0.6	47.2	0.5	0.8	0.3	0.2	16.8	0.7	1.0	1.4	0.7	0.7	0.6	0.7	0.5
광주	13.1	0.6	0.3	0.9	60.9	1.3	0.3	0.2	5.5	0.4	0.6	1.0	2.1	11.4	0.5	0.6	0.3
대전	19.7	1.3	1.2	1.2	1.1	49.1	0.7	2.8	8.8	0.9	3.4	4.9	1.4	0.9	1.3	1.0	0.4
울산	14.2	6.1	2.0	1.1	0.4	0.9	53.9	0.2	7.3	0.8	1.2	1.6	0.4	0.8	5.1	3.6	0.3
세종	20.5	1.1	0.9	1.3	0.6	11.7	0.7	35.3	9.0	0.7	6.3	7.7	1.1	0.7	1.3	0.9	0.2
경기	30.3	0.8	0.6	3.3	0.5	0.9	0.4	0.2	55.0	1.0	1.4	2.2	0.6	0.7	0.8	0.7	0.4
강원	22.1	1.1	0.9	1.8	0.5	1.4	0.7	0.2	11.7	52.2	2.0	1.4	0.6	0.7	1.3	0.8	0.5
충북	16.0	0.6	0.7	1.5	0.4	3.5	0.4	1.4	11.4	1.3	56.0	3.2	0.7	0.5	1.3	0.7	0.3
충남	16.8	0.9	0.5	1.9	0.7	4.7	0.6	1.4	14.6	0.6	2.7	49.9	1.6	1.0	1.1	0.8	0.3
전북	14.7	0.5	0.5	1.1	2.2	2.4	0.4	0.5	7.4	0.6	1.2	2.8	62.0	2.1	0.6	0.7	0.4
전남	11.7	0.9	0.5	1.2	11.3	1.1	0.6	0.3	6.0	0.5	0.7	1.8	1.9	58.7	1.1	1.3	0.4
경북	14.1	2.3	11.0	1.1	0.4	1.3	2.3	0.3	7.2	0.9	1.5	1.7	0.5	0.6	52.4	2.1	0.3
경남	13.4	11.5	1.8	0.8	0.4	0.9	2.0	0.2	5.4	0.5	0.8	1.0	0.5	1.0	2.2	57.5	0.4
제주	20.4	2.0	0.9	1.5	0.8	0.9	0.6	0.1	6.7	1.1	0.4	0.8	0.5	0.9	0.9	1.2	60.4

주: 1) 이직 전 사업장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이동 비중을 나타냄(각 행의 합은 100.0)  
 2) 시도 간 이동 비중이 100% 이상인 경우 음영으로 표시함

• 행정통계로 본 지역고용  
 이나경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연구원

## 지역-산업 고용동향

-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현황
- 지역고용이슈

『지역-산업 고용동향』은 지역-산업별 고용동향과 경제 및 일자리 사정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17개 시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현황』에서 제공하며,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지역 고용 및 산업 이슈와 일자리 정책 현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고용이슈』를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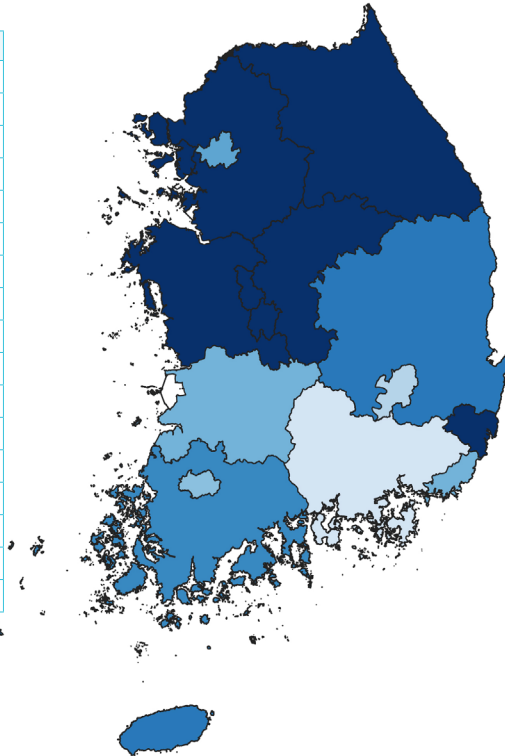
### 이용자 안내

1. 본 『지역-산업 고용동향』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현황』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동 현황

그림 1 17개 시·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광역시도	피보험자 증감률
서울특별시	3.5
부산광역시	3.3
대구광역시	2.9
인천광역시	5.1
광주광역시	3.2
대전광역시	3.1
울산광역시	2.4
세종특별자치시	7.6
경기도	4.6
강원도	5.6
충청북도	4.6
충청남도	4
전라북도	3.3
전라남도	4.1
경상북도	4.2
경상남도	2.6
제주특별자치도	4.2



주: 17개 시도별 피보험자 수 증감률은 2022년 3월~2022년 5월 간 평균값을 나타낸 것임.

자료: 고용보험통합정보시스템(EIS)

- 2022년 3월~2022년 5월 전국 평균 피보험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음
- 세종지역의 피보험자 증가율은 7.6%로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강원(5.6%), 인천(5.1%)도 높은 피보험자 증가율을 보임
- 울산(2.4%), 경남(2.6%), 대구(2.9%) 순으로 피보험자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출판업,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피보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피보험자 감소폭이 가장 컸음

17개 시도별 피보험자 동향

(단위: %, 천 명)

지역	피보험자 증감 상위 산업·지역
수도권	
<p><b>서울</b> 피보험자 450만 8천 명 (+3.5%, +15만 2천 명)</p>	<p><b>산업</b></p> <p>제조 ↑ 전기장비(+13.1%, +3.3), ↓ 석유 정제품(-9.4%, -1.2) 서비스 ↑ 출판업(+10.3%, +29.9),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17.4%, +15.5), ↓ 사업시설 관리(-1.8%, -2.6)</p> <hr/> <p><b>지역</b></p> <p><b>강서구(+6.7%, +14.6)</b>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2022년 4월 가전제품 도매업(4천 명 규모) 본사가 금천구에서 강서구로 이전</p> <p><b>송파구(+5.9%, +18.1)</b>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2021년 12월 운송 관련 서비스 기업 1만 1천 명 신규 채용</p> <p><b>동대문구(-7.2%, -5.1)</b> : 식료품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2021년 11월 식료품 제조 기업(5천 명 규모) 종로구로 이전 - 2022년 3월 건물 관리 용역 업체(2천 명 규모) 마포구 이전</p>
<p><b>인천</b> 피보험자 65만 8천 명 (+5.1%, +3만 2천 명)</p>	<p><b>산업</b></p> <p>제조 ↑ 자동차(+8.9%, +1.4), ↑ 의약품(+15.8%, +1.1) 서비스 ↑ 교육(+16.9%, +4.5), ↑ 사회복지(+7.9%, +4.3),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2.2%, -0.6)</p> <hr/> <p><b>지역</b></p> <p><b>연수구(+9.0%, +6.8)</b> : 의약품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 의약품 제조 기업 신규 채용으로 인한 피보험자 수 증가</p> <p><b>계양구(+6.8%, +3.0)</b>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p>
<p><b>경기</b> 피보험자 343만 8천 명 (+4.6%, +15만 명)</p>	<p><b>산업</b></p> <p>제조 ↑ 반도체, 영상·음향 기기(+2.4%, +7.2), ↑ 식료품(+5.8%, +4.5) 서비스 ↑ 사회복지(+7.0%, +16.3), ↑ 교육(+10.0%, +11.3), ↓ 우편 및 통신업(-6.0%, -1.6)</p> <hr/> <p><b>지역</b></p> <p><b>하남시(+12.6%, +6.9)</b>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사회복지 서비스업</p> <p><b>양평군(+7.9%, +1.2)</b> : 공공행정</p> <p><b>과천시(-1.2%, -0.4)</b>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2021년 10월 건물 관리 서비스 업체(7백 명 규모) 안양시 이전</p> <p><b>이천시(-0.1%)</b>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022년 2월 승강기 제조 기업(2천 명 규모) 이천에서 충주시로 이전</p>

지역	피보험자 증감 상위 산업·지역
<b>충청권</b>	
<b>대전</b> 피보험자 41만 3천 명 (+3.1%, +1만 2천 명)	<b>산업</b> 제조 ↑ 의료, 정밀기기(+11.6%, +0.6) 서비스 ↑ 사회복지(+5.2%, +1.6), ↑ 소매업(+8.4%, +1.3), ↓ 부동산(-4.6%, -0.4)
	<b>지역</b> 유성구(+5.8%, +6.8): 출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구(-0.4%, -0.2): 전문 서비스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공공관계 서비스업 계약만으로 인한 퇴사자 증가(2021년 6월~7월 500명 퇴사) -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퇴사자 증가(2022년 1월 480명 퇴사)
<b>세종</b> 피보험자 7만 5천 명 (+7.6%, +5천 명)	<b>산업</b> 제조 ↑ 화학(+11.6%, +0.4) 서비스 ↑ 교육(+29.3%, +0.8), ↑ 사회복지(+11.1%, +0.7)
<b>충북</b> 피보험자 42만 6천 명 (+4.6%, +1만 9천 명)	<b>산업</b> 제조 ↑ 기타 기계(+28.2%, +3.4), ↑ 식료품(+3.8%, +0.9) 서비스 ↑ 사회복지(+7.1%, +2.5), ↑ 교육(+10.8%, +2.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10.2%, -0.4)
	<b>지역</b> 충주시(+10.7%, +5.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 2022년 2월 승강기 제조 기업(2천 명 규모) 이천에서 충주시로 이전
<b>충남</b> 피보험자 56만 4천 명 (+4.0%, +2만 2천 명)	<b>산업</b> 제조 ↑ 1차 금속(+18.4%, +2.3), ↑ 기타 기계(+4.2%, +1.3) 서비스 ↑ 사회복지(+7.1%, +3.3), ↑ 교육(+9.3%, +1.5), ↓ 전문 서비스(-11.9%, -0.9)
	<b>지역</b> 아산시(+5.2%, +5.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b>호남권</b>	
<b>광주</b> 피보험자 31만 2천 명 (+3.2%, +1만 명)	<b>산업</b> 제조 ↑ 자동차(+6.7%, +1.0), ↓ 반도체, 전자부품(-3.8%, -0.3) 서비스 ↑ 사회복지(+8.7%, +2.7)
	<b>지역</b> 남구(+4.9%, +1.3):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b>전북</b> 피보험자 39만 7천 명 (+3.3%, +1만 3천 명)	<b>산업</b> 제조 ↓ 1차 금속(-35.3%, -1.0), ↓ 섬유(-12.0%, -0.5) 서비스 ↑ 사회복지(+11.5%, +5.0)
	<b>지역</b> 고창군(+5.4%, +0.5): 식료품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지역	피보험자 증감 상위 산업·지역
<p><b>전남</b> 피보험자 42만 5천 명 (+4.1%, +1만 7천 명)</p>	<p><b>산업</b></p> <p>제조 ↑ 기타 운송장비(+5.2%, +0.8), ↑ 전기장비(+19.4%, +0.8) 서비스 ↑ 사회복지(+8.0%, +3.6)</p> <hr/> <p><b>지역</b></p> <p>신안군(+9.3%, +0.5): 종합 건설업, 공공행정 무안군(+7.7%, +1.2): 종합 건설업, 공공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구례군(-3.8%, -0.2):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p>
<p><b>영남권</b></p>	
<p><b>부산</b> 피보험자 75만 8천 명 (+3.3%, +2만 4천 명)</p>	<p><b>산업</b></p> <p>제조 ↓ 섬유제품(-3.2%, -0.2) 서비스 ↑ 사회복지(+7.5%, +4.6), ↑ 음식점 및 주점업(+9.9%, +3.4)</p> <hr/> <p><b>지역</b></p> <p>해운대구(+6.3%, +4.4):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강서구(+6.2%, +5.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상구(-0.2%, -0.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021년 12월 신발 제조 기업(2백 명 규모) 강서구로 이전</p>
<p><b>대구</b> 피보험자 49만 6천 명 (+2.9%, +1만 4천 명)</p>	<p><b>산업</b></p> <p>제조 ↓ 의복(-6.3%, -0.2) 서비스 ↑ 사회복지(+6.2%, +2.8), ↑ 교육(+10.5%, +2.7)</p> <hr/> <p><b>지역</b></p> <p>수성구(+4.7%, +2.8):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p>
<p><b>울산</b> 피보험자 32만 1천 명 (+2.4%, +7천 명)</p>	<p><b>산업</b></p> <p>제조 ↑ 기타 운송장비(+2.9%, +0.9) 서비스 ↑ 사회복지(+9.1%, +1.7), ↓ 과학기술 서비스(-36.2%, -0.3)</p> <hr/> <p><b>지역</b></p> <p>중구(+4.6%, +1.8):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p>
<p><b>경북</b> 피보험자 66만 명 (+4.2%, 2만 7천 명)</p>	<p><b>산업</b></p> <p>제조 ↑ 화학(+8.4%, +1.4), ↑ 금속가공(+4.9%, +1.2) 서비스 ↑ 사회복지(+7.7%, +4.6), ↑ 교육(+12.9%, +3.3)</p> <hr/> <p><b>지역</b></p> <p>울릉군(+14.5%, +0.2): 전문 서비스업 영양군(+11.9%, +0.3): 종합 건설업</p>

지역	피보험자 증감 상위 산업·지역
<p><b>경남</b></p> <p>피보험자 81만 명 (+2.6%, +2만 1천 명)</p>	<p><b>산업</b></p> <p>제조 ↑ 전기장비(+5.5%, +1.4), ↓ 기타 운송장비(-4.0%, -2.5) 서비스 ↑ 사회복지(+8.9%, +5.7), ↑ 보건(+4.1%, +2.1)</p> <hr/> <p><b>지역</b></p> <p>남해군(+6.6%, +0.4): 공공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함양군(+5.9%, +0.4): 공공행정 거제(-4.5%,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p>
<b>강원·제주권</b>	
<p><b>강원</b></p> <p>피보험자 34만 9천 명 (+5.6%, +1만 8천 명)</p>	<p><b>산업</b></p> <p>제조 ↑ 식료품(+4.5%, +0.6) 서비스 ↑ 사회복지(+7.8%, +2.7), ↑ 음식점 및 주점업(+17.3%, +2.7), ↓ 금융업(-5.6%, -0.4)</p> <hr/> <p><b>지역</b></p> <p>화천군(+11.2%, +0.5): 종합 건설업, 공공행정 고성군(+9.7%, +0.5): 종합 건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p>
<p><b>제주</b></p> <p>피보험자 15만 3천 명 (+4.2%, +6천 명)</p>	<p><b>산업</b></p> <p>제조 ↑ 식료품(+7.1%, +0.2) 서비스 ↑ 음식점 및 주점업(+13.1%, +1.3), ↑ 숙박업(+9.9%, +0.7)</p>

- 주: 1) 산업은 각 지역별로 피보험자 증감폭이 큰 산업을 보여줌.  
 2) 기초 지역은 피보험자 증감을 변동이 큰 지역과 그 지역의 주요 증감 산업을 나열함.  
 3) 변동값은 전년동기대비 피보험자 수 증감률, 증감폭(단위 : 천 명)을 나타낸 것으로, 2022년 3월~5월 평균값을 전년동기대비로 나타낸 것에 해당함.  
 4) 고용보험DB 내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개정)를 따르며, 해당 표는 산업중분류에 따라 나타내었음.



■ 지역통신의 흐름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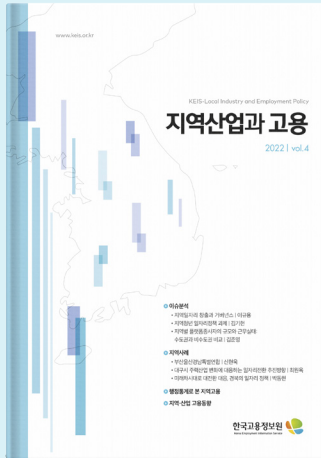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분기
<p>경기권</p>	<p><b>서울</b></p> <p><b>서비스</b> 중소 IT 기업 인력난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 mismatch 발생, 구인난 지속</p> <p><b>정책</b> 폐업 소상공인, 청년 대상 사회안전망 분야 공공일자리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청년 등 6,6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운영</p> <p><b>인천</b></p> <p><b>서비스</b>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2022.06.)                      ↑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 승객은 전년 대비 404% 증가함                      ↓ 항공업계가 정상화되기 전 지원금 중단으로 휴직자 복귀의 부담증가 예상</p> <p><b>경기</b></p> <p><b>제조</b>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 완료(2022.02.)                      ↓ 본사 이전으로 인해 피보험자 수 2,500명 감소</p> <p><b>제조</b> 디아지오코리아 희망퇴직 신청 접수(2022.04.)                      ↓ 16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퇴직 인원의 최종 근무일은 5월 31일</p> <p><b>정책</b>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컨소시엄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업무 협약 체결                      ↑ 2026년까지 5년간 경기 북부 섬유산업 고도화 및 고용안정에 총 390억 원 투자</p>
<p>강원권</p>	<p><b>강원</b></p> <p><b>서비스</b> 플라이강원 신규사업 진출 및 신규 채용 예정                      ↑ 하반기 항공화물사업 진출로 상반기 150명 신규 고용 예정</p> <p><b>서비스</b>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정식 개장(2022.05.)                      ↑ 연내 1,600여 명 직접고용, 직간접 고용효과 8,900여 명 기대</p> <p><b>제조</b> 횡성군, 동원시스템즈 횡성 제2공장 신설 예정                      ↑ 2024년까지 제2공장 신설, 지역인재 채용계획</p>
<p>충청권</p>	<p><b>대전</b></p> <p><b>정책</b> 바이오 특화 창업지원시설 '대전바이오창업원' 구축                      ↑ 2026년부터 바이오 창업의 혁신거점으로 운영하여 바이오벤처 창업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예정</p> <p><b>정책</b> 대전산업단지 산단대개조 전국 공모사업 선정                      ↑ 2023년부터 3년간 5,800억 원을 투입, 7천여 명 고용 창출 기대</p> <p><b>세종</b></p> <p><b>정책</b> 세종행복일자리진흥원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 추진                      ↑ 세종시 일자리 정책 일원화를 위한 기구로 2024년 출범을 목표로 협의 진행</p> <p><b>충북</b></p> <p><b>서비스</b> 청주 오송,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                      ↑ 2025년 착공 예정이며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특화한 대학과 병원, 연구소, 창업시설 등을 조성, 운영인력 400여 명 고용 창출 예상</p> <p><b>제조</b> 충북 내 기업 추가 투자 예정                      ↑ 청주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예정(2023년 착공)                      ↑ 증평군, 에스디바이오센서(주) 1,88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공장 신설</p> <p><b>충남</b></p> <p><b>정책</b> 도내 3개 산단 산단대개조 전국 공모사업 선정                      ↑ 천안·아산의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차 부품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9,469억 원 투입, 향후 일자리 창출 5,000명 기대</p>

구분	2022년 2분기
<p>호남권</p>	<p><b>광주</b></p> <p><b>서비스</b> ㈜우아한 형제들 고객센터 신설 투자협약 체결                      ↑ 5월 500석 규모의 고객센터 신설로 신규 일자리 창출 예정</p> <p><b>전북</b></p> <p><b>정책</b> 조선분야 탄소중립 성장기반 확보                      ↑ 산업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선정, 2026년까지 총 170억 원 규모로 사업 진행 예정</p> <p><b>전남</b></p> <p><b>제조</b> 대한조선 13년 만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                      ↑ 대한조선은 KH그룹 컨소시엄과 2,000억 원 규모 투자유치(05.20), 회사의 경영정상화로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p> <p><b>정책</b> '2022년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                      ↑ 조선사에 신규 입사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p> <p><b>정책</b> 대불국가산단,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추가 선정                      ↑ 2025년까지 3,619억 원을 투입, 일자리 창출 2만 5천 명 기대</p>
<p>영남권</p>	<p><b>부산</b></p> <p><b>제조</b> 조선(기자재)업 인력 수급 애로                      ↓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도 숙련공 및 하청 노동자가 부족하여 생산 지체</p> <p><b>정책</b> 부산시, 울산·경남과 함께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공모 선정, 지역기업 인식 개선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출향 청년 귀환 추진</p> <p><b>대구</b></p> <p><b>제조</b> 성림첨단산업(주) 매출 증대, 공장 증설로 추가 채용 기대                      ↑ 수요 증대가 예상되어 대구 테크노폴리스 고내열성 연구자석 제조공장 건립, 하반기 양산 본격화 계획</p> <p><b>경북</b></p> <p><b>제조</b> 구미시, SK실트론 웨이퍼 공장건설 투자양해각서 체결(2022.03)                      ↑ 구미시가 3산단 내 공장건설을 위한 1조 496억 원 투자, 기업 고용 1,000명 예상</p> <p><b>제조</b> 구미시, 토텍 이차전지 자동화장비 투자양해각서 체결(2022.05)                      ↑ 420억 원을 투자하여 2차 전지 자동화장비 제조공장 신설, 50여 명 신규고용 예정</p> <p><b>서비스</b> 영천시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폐업 통보                      ↓ 누적 손실 지속 발생으로 5월 1일부터 전체 공장 가동 중단, 2022년 6월 30일 기업 철수 계획 발표, 130여 명 실직 예상</p> <p><b>경남</b></p> <p><b>서비스</b> 창원시, 마켓컬리 신규 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배송기획, 운영개선, 3자 배송 분야에서 최소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채용 예정</p> <p><b>서비스</b> 함양군, 쿠팡 첨단 물류센터(FC) 건립 예정                      ↑ 투자금 720억 원 이상 투입, 3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 창출 기대</p>
<p>제주권</p>	<p><b>제주</b></p> <p><b>서비스</b>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인력난 및 대규모 채용                      ↓ 전세버스 가동률 증가로 인력 부족                      ↑ 대규모 호텔 공개 채용(신화월드 400여 명, 드림타워 200여 명 채용 예정)</p> <p><b>서비스</b> 제주 봉개 조각장 2023년 폐쇄 예정                      ↓ 근로자 60여 명 고용승계 미확정, 고용 협의 및 실업 방지 지원 필요</p>

주 : **제조** 제조업, **서비스** 서비스업, **정책** 지자체 정책, **↑** 고용시장 개선, **↓** 고용시장 악화



# 『지역산업과 고용』 원고모집 안내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역 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등에 대한 전문간행물 『지역산업과 고용(KEIS-Local Industry and Employment Policy)』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서는 지역 일자리 및 고용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정책분석, 지역 일자리 이슈 및 사례 등을 다룬 원고를 상시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지역 고용과 관련된 자유주제 원고

## 분량

A4 기준 5~10매 내외(hwp 파일 제출)  
\*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원고제출 및 기타 문의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사무처

### 사무간사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오윤석 연구원

☎ 043-238-9214 ✉ wakun5@keis.or.kr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 편집위원

전 인(영남대학교)	정한나(목포대학교)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정은진(한국직업능력연구원)
동진우(경남연구원)	김동규(한국고용정보원)
김수진(한국고용정보원)	강민정(한국고용정보원)

### 편집간사

오윤석(한국고용정보원)

발행인 나영돈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디자인·인쇄 전우용사촌